

2021 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22. 9.

국회환경노동위원회

【 목 차 】

1. 감사의 목적	1
2. 감사기간	1
3. 감사실시 대상기관	1
4. 감사반의 구성	3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6
6.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현황	9
7. 주요 감사 실시내용	
1) 환경부 소관	15
2) 고용노동부 소관	26
3) 기상청 소관	37
4)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관	39
8.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 환경부 소관	40
2) 고용노동부 소관	101

3) 기상청 소관	160
4)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관	172

1. 감사의 목적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 국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 예산안 심사 등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2. 감사기간 : 2021. 10. 1(금) ~ 10. 21(목) [21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 총 75개 기관	
<p>1. 환경부</p> <p>가. 본 부</p> <p>나. 소속기관</p> <p>(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p> <p>(2) 국립환경과학원</p> <p>(3) 국립생물자원관</p> <p>(4) 국립환경인재개발원</p> <p>(5) 화학물질안전원</p> <p>(6)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p> <p>(7)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p> <p>(8)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p> <p>(9) 한강유역환경청</p> <p>(10) 낙동강유역환경청</p> <p>(11) 금강유역환경청</p> <p>(12) 영산강유역환경청</p> <p>(13) 수도권대기환경청</p> <p>(14) 원주지방환경청</p> <p>(15) 대구지방환경청</p> <p>(16) 전북지방환경청</p> <p>(17) 한강홍수통제소</p> <p>(18) 낙동강홍수통제소</p> <p>(19) 금강홍수통제소</p> <p>(20) 영산강홍수통제소</p>	<p>다. 산하 공공기관</p> <p>(1) 한국수자원공사</p> <p>(2) 한국환경공단</p> <p>(3) 국립공원공단</p> <p>(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p> <p>(5) 한국환경산업기술원</p> <p>(6) 국립생태원</p> <p>(7)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p> <p>(8) 한국상하수도협회</p> <p>(9) 환경보전협회</p> <p>(10) 워터웨이플러스</p> <p>(11)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p> <p>(12)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p>

위원회 선정 대상 기관 : 총 75개 기관

2. 기상청

가. 본 부

나. 소속기관

- (1) 수치모델링센터
- (2) 기상기후인재개발원
- (3) 수도권기상청
- (4) 부산지방기상청
- (5) 광주지방기상청
- (6) 강원지방기상청
- (7) 대전지방기상청
- (8) 대구지방기상청
- (9) 제주지방기상청
- (10) 국가기상위성센터
- (11) 기상레이더센터
- (12) 국립기상과학원
- (13) 항공기상청

다. 산하 공공기관

- (1)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2) APEC 기후센터
- (3)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3. 고용노동부

가. 본 부

나. 소속기관

- (1) 중앙노동위원회
(12개 지방노동위원회 포함)
- (2) 최저임금위원회
- (3)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4)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5)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6)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8) 부산지방고용노동청
- (9) 대구지방고용노동청
- (10)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11)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다. 산하 공공기관

- (1) 근로복지공단
-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3) 한국산업인력공단
- (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5) 한국고용정보원
- (6)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 (7)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8) 노사발전재단
- (9) 건설근로자공제회
- (1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11) 한국잡월드
- (12) 한국고용노동교육원

4. 경제사회노동위원회

4. 감사반의 구성

가. 감사위원(단일반)

감사반장	박대출 위원장	(국민의힘)
감사위원	안호영 위 원	(더불어민주당)
”	노응래 ”	”
”	박범계 ”	”
”	송옥주 ”	”
”	윤준병 ”	”
”	이수진 ”	”
”	임종성 ”	”
”	장철민 ”	”
”	임이자 ”	(국민의힘)
”	권영세 ”	”
”	김성원 ”	”
”	김 응 ”	”
”	박대수 ”	”
”	강은미 ”	(비교섭단체)
”	윤미향 ”	(무소속)

나. 사무보조자 : 고 상 근 (수석전문위원)
최 선 영 (전문위원)
이 지 연 (입법조사관)
정 종 선 (")
강 세 욱 (")
이 준 화 (")
민 주 흥 (")
황 진 솔 (")
권 순 천 (")
박 효 민 (")
유 미 경 (")
안 은 주 (")
민 준 흥 (입법조사관보)
강 미 래 (")
진 현 이 (주 무 관)
황 규 정 (")
정 경 애 (")

다. 속 기 사 : 권초롱, 허정현, 손아영, 강순오, 김아라
속기주무관

라.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김지영	정책연구위원(4급상당)	더불어민주당
정길채	정책연구위원(4급상당)	"
윤미경	정책연구위원(1급상당)	국민의힘
이재성	정책연구위원(1급상당)	"

마. 감사위원 보좌진

김성욱	보좌관	(박대출 위원장실)
이보라	보좌관	(안호영 위원실)
김성열	보좌관	(노웅래 위원실)
윤종우	보좌관	(박범계 위원실)
김선홍	보좌관	(송옥주 위원실)
양지현	보좌관	(윤준병 위원실)
홍은광	보좌관	(이수진 위원실)
설동찬	보좌관	(임종성 위원실)
이지혜	보좌관	(장철민 위원실)
박준용	보좌관	(임이자 위원실)
임준홍	보좌관	(권영세 위원실)
양우식	보좌관	(김성원 위원실)
지욱현	보좌관	(김 웅 위원실)
박현영	보좌관	(박대수 위원실)
안중언	보좌관	(강은미 위원실)
조정훈	보좌관	(윤미향 위원실)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자	시 간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비 고
10월 1일(금)		자료정리		
10월 2일(토) ~4일(월)		공휴일		
10월 5일 (화)	10:00	•환경부	환경부회의실 (세종시)	출장(세종시)
10월 6일 (수)	10:00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회의실 (세종시)	출장(세종시)
10월 7일 (목)		자료정리		
10월 8일 (금)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상청 •수치모델링센터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수도권기상청 •부산지방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 •대전지방기상청 •대구지방기상청 •강원지방기상청 •제주지방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국립기상과학원 •항공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APEC 기후센터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국회	
10월 9일(토) ~11일(월)		공휴일		
10월 12일 (화)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12개 지방노동위원회 포함) •최저임금위원회 	국회	

일 자	시 간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충부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10월 13일 (수)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화학물질안전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 •한강홍수통제소 •낙동강홍수통제소 •금강홍수통제소 •영산강홍수통제소 	국회	
10월 14일 (목)		자료정리		
10월 15일 (금)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국회	

일 자	시 간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사발전재단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10월 16일(토) ~17일(일)		공휴일		
10월 18일 (월)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보전협회 •워터웨이플러스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회	
10월 19일 (화)	13:30	시화호조력발전소 현장시찰		출장
10월 20일 (수)	10:00	환경부 기상청	국회	종합감사
10월 21일 (목)	10:00	고용노동부	국회	

6.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현황

【환경 분야】

(단위 : 인)

구 분	증 인	참고인	계
출 석 요 구	10	14	24
출 석	10	14	24
불 출 석	-	-	-

【고용노동 분야】

(단위 : 인)

구 분	증 인	참고인	계
출 석 요 구	7	28	35
출 석	6	28	34
불 출 석	1	-	1

일반 증인 및 참고인 현황

■ 2021. 10. 5. 환경부 본부

구분	성명	직책(직업)	신문요지	출석
증인 (7명)	박찬훈	삼성전자 부사장	온실가스 배출 저감시설 하자 문제	○
	이찬희	(사)한국포장재재활용 사업공제조합 이사장	포장재조합은 공익법인으로 등록되어 제대로 된 감사 없이 단순지도점검만 받고 있어 부실운영 가능성	○
	박현	포스코 전무	탄소 배출 저감 방안 마련 질의	○
	두혁균	(주)천하 대표이사	새만금 태양광단지에 반입된 철강슬래그의 환경 유해성 및 적절성	○
	조민수	(주)코스트코코리아 대표	사업장내 폐기물 및 재활용폐기물 무단방류, 하남시 음식물 쓰레기 수질오염 관련	○
	방경만	KT&G 부사장	담배꽂초에서 나온 미세플라스틱으로 생태계 파괴 심각,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알람 의무가 있음에도 책임 부족	○
	배덕효	한국수자원학회 회장	댐 조사 연구용역 관련	○
참고인 (6명)	이승준	부경대학교 교수	4대강녹조오염 관련 전문가 견해 확인	○
	김해범	사단법인 주방용 음식물분쇄기 협회 회장	주방용 음식물 분쇄기 정책에 대한 의견 청취	○
	박승환	법무법인 현재 변호사	4대강 관련 전문가 견해 확인	○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시멘트산업 순환자원 재활용 현황, 전기차 배터리 ESS 재활용 산업 현황, 수도권 쓰레기 소각 및 매립 정책 문제점 관련	○
	임종찬	(주)우성금속 대표	익산 폐석산 주물업체 비상대책위원회 관련	○
	김영세	농업	주민 건강영향 실태조사의 신뢰성 확보	○

■ 2021. 10. 6. 고용노동부 본부

구분	성명	직책(직업)	신문요지	출석
증인 (3명)	권순호	현대산업개발 대표	사업장 내 안전관리체계 관련	○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사장	직장내 괴롭힘 등 조직문화 관련	○
	김규덕	삼성물산 전무	산재사망사고 다발사업장 건설현장에서 반복적 근로사망사고 발생의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규명	○
참고인 (8명)	배기영	하림신노조위원장	노조파괴행위 및 부당노동행위 관련	○
	송영섭	금속법률원 변호사	현대자동차그룹 불법파견 논쟁 관련	○
	남영미	스마일게이트 노동자	IT업계 직장내 갑질, 괴롭힘 사례 증언 관련	○
	조승규	반올림 공인노무사	태아산재 실태 및 제도개선 관련	○
	김종철	전국택배대리점연합 회장	김포집배점 불상사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책마련을 위한 의견 청취	○
	송시영	서울교통공사올바른노조위원장	노사화합, 노동조합에 대한 MZ세대 의견 청취	○
	이상훈	전국보안방재노동조합 위원장	사내 노사갈등 문제 관련	○
	최인숙	남양유업 노동자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부당인사발령 피해 증언 관련	○

■ 2021. 10. 12.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구분	성명	직책(직업)	신문요지	출석
참고인 (7명)	오상훈	삼성화재 노조위원장	삼성화재 평협노조 설립신고증 교부 및 평협노조 전환 문제점 관련	○
	정진영	공공운수노조 쿠팡지부장	쿠팡노동자 사용 쿠팡치 시간 조작 의혹 및 열악한 근로실태 파악 관련	○
	박기일	줄릭파마코리아 지부장	직장내 괴롭힘 악용한 노조탄압 관련	○
	허준	민주노총서비스 연맹 KPGA 지회장	한국프로골프협회 내 성희롱 및 주52시간 도입 관련	○
	이기석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 지부장	민노총 화물연대·타워크레인의 노동자 해고강요 등 문제	○
	최형철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화물운송분과 본부장	민노총 화물연대·타워크레인의 노동자 해고강요 등 문제	○
	주우	한국방송연기자 노동조합 사무국장	방송엑스트라 고용실태 및 노동조건 증언	○

■ 2021. 10. 13. 환경부 소속기관

구분	성명	직책(직업)	신문요지	출석
증인 (2명)	이시우	포스코 부사장	2020년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대기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기업으로 발표, 연간 대기 및 수질오염법 위반 내역 존재	○
	이계창	(주)동우팜투데이블 대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
참고인 (3명)	최회범	남원하도마을 이장	'20년 8월 집중호우피해에 대한 후속 대책	○
	오경재	원광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익산장점마을 건강영향평가내용 및 주변마을환경 피해구제 의견청취	○
	유민채	청주시 복이면 이장	청주시 복이면 폐기물 소각장 집단 암 발병 문제 지적 및 지자체, 지방청 직무유기 문제	○

■ 2021. 10. 15.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구분	성명	직책(직업)	신문요지	출석
증인 (1명)	김병준	배달의민족 대표	라이더 사망사고 산재인정 및 위로금 촉구, 일방적 배차로 인한 갑질 행위, 플랫폼 노동자 처우 및 과도한 수수료 문제	○
참고인 (7명)	신현종	노무법인푸른솔 대표노무사	소음성난청판정 관련	○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플랫폼 노동자 처우 문제와 산재가입 관련	○
	신영선	생명보험협회 시장개발본부장	퇴직연금 DC형 수익 관련	○
	성희직	광산진폐권익연대 상담소장	집단진폐 해결 관련	○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	조선대 광주근로자건강센터 불법파견 문제	○
	현재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연구원	학교급식노동자 직업성 암 관련	○
	김소연	샤빌코리아 지부장	직장 내 성희롱 관련 피해 증언	○

■ 2021. 10. 20. 환경부 및 기상청(종합감사)

구분	성명	직책(직업)	신문요지	출석
증인 (1명)	송호섭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이사	플라스틱 일회용품 대책 관련	○
참고인 (5명)	이용훈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장	분석결과 자료조작 관련	○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하수도법 개정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주방용 오물분쇄기 관련) 의견 청취	○
	김성태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협회장	전기차 충전기 문제에 대한 의견 청취	○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	탄소중립 관련	○
	김봉용	농업	재해, 재난 상황에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	○

■ 2021. 10. 21. 고용노동부(종합감사)

구분	성명	직책(직업)	신문요지	출석
증인 (3명)	앤토니노 리스마티 네즈	한국맥도날드(유) 대표이사	알바노동자 노동환경 개선(휴게공간, 노동시간, 책임 전가 등)	○
	이태권	바로그 대표	배달라이더 산재사고 관련	X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육아휴직 노동자 직장 괴롭힘 관련	○
참고인 (6명)	조우상	전국영양교사회 부회장	학교 내 안전보건관리 체계 관련	○
	신상아	서울여성노동자회 회장	법인대표 성희롱 관련	○
	정성훈	민노총 서울본부 서울대시설분회장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및 직장 내 괴롭힘 및 과로사 관련	○
	배정연	스타일리스트	언어 갑질 및 적은 임금 관련	○
	이지석	모두의연구소 교장	KDT 현황 및 개선방안 관련	○
	이태성	한국발전산업노조 사무국장	석탄발전 일자리 문제 관련	○

7. 주요 감사 실시내용

1) 환경부 소관

주요 감사 실시내용
▶ 환경부 본부 ◀
【공통사항】
(1) 환경부 자체평가 관리 강화 필요
(2)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혜자에 대한 인사 조치 검토 필요
(3) 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 등의 방만경영에 대한 조치 필요
(4) 환경부 인사 특혜 문제 해결 필요
(5) 섬진강 유역 환경청 신설 필요
(6) 자동차 환경협회 위탁 업무 관리 소홀 문제 대응 필요
(7) 환경 정보시스템 플랫폼화 필요
(8) 환경부의 공직기강 개선 필요
(9) 녹색건축 인증 기준에 조류충돌 저감 관련 사항 반영 필요
【녹색전환 부문】
(1) 시멘트 제조업 규제 강화 및 통합허가 대상에 포함 필요
(2) 시멘트 소성로 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필요
(3) 시멘트 자재 중금속 폐기물 사용 규제 필요
(4) 녹색산업 분류체계(K-택소노미) 도입 시 산업계와의 조율 필요
【자연보전 부문】
(1) 불법 성토로 인한 파주지역 생태계 훼손 문제 해결 필요
(2) 산림 관련 사무에 대한 환경부의 적극적 참여 필요
(3) 새만금 신공항 부지의 야생조류 충돌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주요 감사 실시내용

- (4) 새만금 신공항 건설 결정 부동의 필요
- (5) 환경영향평가제도 내실화 필요
- (6) 대장동 환경영향평가 관련 의혹 해소 필요
- (7) 유기 야생동물 보호·관리 강화 필요
- (8) 반달가슴곰 보호 대책 마련 필요
- (9) 사육곰 불법 증식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10) 아프리카 돼지열병 살처분 시 렌더링 방식 확대 필요

【자원순환 부문】

- (1) 민간소각장에 대한 TMS 설치 의무화 및 주민 감시체계 법제화 필요
- (2) 투명 폐트병 재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3) 플라스틱 인조 꽃 수입 축소 방안 마련 필요
- (4) 불연물 사전 선별처리 제도의 조속한 시행 필요
- (5)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선별 효율화 방안 마련 필요
- (6) 담배꽂초의 수거 및 재활용 대책 마련 필요
- (7) 익산시 폐석산 오염사고의 책임 소재 재검토 필요
- (8) 제강슬래그의 유해성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9) 자가진단 키트의 처리 대책 마련 필요
- (10) 흡수패드의 유해성 방지 방안 마련 필요
- (11)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 강화 대책 마련 필요
- (12) 소각시설 활용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13) 시멘트의 안전관리기준 마련 필요
- (14) 다회용 컵 사용 허용과 관련된 지침 정비 필요
- (15) 폐배터리 안전관리 대책 마련 필요
- (16) 비산재에 대한 유해성 조사 실시 필요
- (17) 재난폐기물 처리 보조금의 집행 관리 강화 필요

주요 감사 실시내용

- (18) 태양광 폐패널의 적정 처리 대책 사전 준비 필요
- (19) 병입 수돗물의 생산·사용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20) 배달용 1회용기 사용 억제 대책 마련 필요

【대기보전 부문】

- (1) 시멘트 공장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 철저히 적용 필요
- (2) 시멘트 공장 SCR 용자 제도 개선 필요
- (3) 광양만 근처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대책 필요
- (4) 포스코 굴뚝 TMS 설치 관리 및 노동자 직업병 문제, 주변 시민들의 영향 등 대책 마련 필요
- (5) 상위 20개 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배출량 보도 필요
- (6) GHP 인증절차 도입 필요
- (7) GHP 배출허용기준 재조정 필요
- (8) 양방향 전기집진기 오존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책 필요
- (9) 산업밀집지역 초미세먼지 농도 완화 대책 필요
- (10) 친환경차 보조금 사업 운영 관리 필요
- (11) 대기오염총량제 엄격히 시행 필요
- (12) 전기차 충전인프라 시장친화적 운영 필요
- (13) 전기차 충전소 보조금 관리 필요
- (14) 전기차 충전기 고장 대책 마련 필요
- (15) 아스콘 사업장 특정 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조정 필요
- (16) 고속도로 휴게소 급속 공공 충전기 확충 필요
- (17) 전기차 충전 시 결제 카드 통합 필요

【기후 부문】

- (1)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 관련 노력 필요
- (2)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전환 및 수송 부문 관련 계획 수립 필요

주요 감사 실시내용

- (3) 탄소중립 관련 대국민 인식 제고 필요
- (4) 삼척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실태 조사 필요
- (5)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력 필요
- (6) 온실가스 흡수 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 수립 필요
- (7) 2030 NDC 달성 과정에서 산업계 타격 최소화 필요
- (8) NDC 배출량 산정 기준 통일 필요
- (9) 합리적인 NDC 달성 방안 마련 필요
- (10) 기업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시 할당량 축소 필요
- (11)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12) 기후대응기금 단위사업 효율적 집행 필요
- (13) 지속가능 평가보고서 공시제도의 기준 등 정비 필요
- (14) 그린뉴딜 사업 선정 부적절

【환경보건 부문】

- (1) 폐놀품 단열재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체계적 연구 필요
- (2) 환경책임보험 제도 개선 필요
- (3) 미세먼지 측정기 사후관리 필요
-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신·증설 규제 개혁 필요
- (5) 가습기 살균제 조정위원회 구성 시 피해자 참여 확대 필요
- (6) 천안 장산리 환경조사 및 주민건강영향 실태조사 신뢰성 확보 필요
- (7) 장점마을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8) 층간소음 기준치 개선 필요
- (9)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조사결과 공개 필요
- (10) 어린이 활동공간(키즈카페 등) 실내 공기질 개선 필요
- (11) 포스코 광양제철소 독성물질(시안가스) 발생 문제
- (12) 포스코 광양제철소 독성물질 조사결과 수정 지시 문제

주요 감사 실시내용

- (13) 미승인 유해 살생물제 유통 근절 필요
- (14) 공공건축물 석면 안전 정보 철저한 관리 필요
- (15) 지하철 에어컨 필터 식중독균 검출 관련 점검 필요
- (16)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 비동물실험으로 대체 필요
- (17) 신종 화학오염물질 모니터링 지속적 추진 필요

【물관리 부문】

- (1) 지방 하천 제방 관리 국고보조사업으로의 전환 필요
- (2) 2020년 홍수 피해에 대한 신속·적정한 보상 필요
- (3) 새만금 기본계획 수정 필요
- (4) 4대강 자연성 회복 위한 녹조 문제 대응 필요
- (5)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수질오염 재발 방지 필요
- (6) 스마트 상수도 사업 추진 방법 개선 필요
- (7)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제품 근절대책 마련 필요
- (8) 주방용 오물분쇄기 금지 방안 재고 필요
- (9) 낙동강 보 상시개방 결정 재고 필요
- (10) 팔당 상수원 수질 관리 위한 특대고시 개정 등 조치 필요
- (11) 섬진강 유역 주민에 대한 섬진강댐 용수 배분 필요
- (12) 취·양수장 취수시설 개선 필요
- (13) 금강하구 해수유통 필요
- (14) 내성천 수질·수생태계 회복을 위한 영주댐 문제 해결 필요
- (15) 통합물관리 예산 조속히 편성 필요
- (16) 수상 태양광 사업으로 인한 미세플라스틱 문제
- (17) 군남댐 보강공사 필요
- (19) 대청호 주변 주민들 농어촌민박 영업 허용 필요
- (20) 댐 건설로 수몰된 미보상 지역에 대한 적극 보상 필요

주요 감사 실시내용

【소속·산하기관 공통사항】

- (1) 골프장 관련 환경오염 증가에 대한 각 지방청의 관리 개선 필요
- (2) 환경영향평가 독립기관공탁제 도입 필요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 (1) 2020년 홍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 필요
- (2) 대기오염에 따른 농작물 피해 분쟁 처리 기준 마련 필요

▶ 국립환경과학원 ◀

- (1) 조류경보제 개선안 보완 필요
- (2) 국내 전기차 주행거리 인증 개선 필요
- (3) 폐놀폼 단열재에 대한 체계적 연구 진행 관리 필요
- (4) 수질총량관리센터 직제 용역 진행 상황 파악 및 해결방안 마련 필요

▶ 화학물질안전원 ◀

- (1) 화학물질 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요령 고지 관리 필요
- (2)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 운영 개선 필요
- (3) 울산센터 드론 미사용 문제
- (4) 울산센터 제독 장비 활용 문제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

- (1) ASF 양돈농가 확산 방지 대책 마련
- (2) 연구직 인력 증원 필요

▶ 한강유역환경청 ◀

- (1) 대장동 환경영향평가 송전탑 지중화 문제

주요 감사 실시내용

- (2) 환경감시단 정원 대비 현원 충원 필요
- (3)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방지 대책 필요
- (4)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재발 방지 필요
- (5) 대장동 개발 송전선로 지중화 관련 소송 적극 대응 필요
- (6) 특별종합대책 고시 제15조 개정 필요
- (7) 수계지역 주변 토지 매각 논란 해명 필요
- (8) 지뢰폭발 사고 재발 방지 대책 필요
- (9) 사육곰 농장주 불법행위 단속 필요
- (10)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부족 문제 해결 필요
- (11) 완충저류시설에 대한 환경부 차원 적극 관리 필요

▶ 낙동강유역환경청 ◀

- (1) 완충저류시설 설치의무 조속히 이행 필요
- (2) 양상 사송 공공주택개발지구 고리도룡농 서식지 보호 대책 마련
- (3) 부산 대저대교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 허위 작성
- (4) 유해화학사고 방지 위한 안전관리 전문가 컨설팅 필요

▶ 금강유역환경청 ◀

- (1) 환경 범죄 저감 대책 마련 필요
- (2) 청원 북이면 주민건강 실태조사 재실시 필요
- (3) 천안 장산5리 주민건강 실태조사 계획 재수립 필요

▶ 영산강유역환경청 ◀

- (1)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 관련 자가측정제도 개선 필요
- (2) 구례군 수해폐기물 처리 비용 전용에 대한 조사 필요
- (3) 섬진강 유역 적정 유량 확보 위한 개선책 마련 필요
- (4) 섬진강 수해 재발 방지 위한 저류지 확보 필요

주요 감사 실시내용

(5) 광주하수처리장 시설개량 필요

▶ 원주지방환경청 ◀

(1) 쌍용매립장 사업 관련 부실 환경영향평가 조사 필요

▶ 대구지방환경청 ◀

(1) 환경전문업체 컨설팅 강권 관행 철저한 조사 필요

(2) 화학물질배출량 보고 교육 참석률 제고 필요

(3) 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 가동률 저조 관련 대책 필요

(4)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률 저조 관련 대책 필요

(5) 영주댐 유해남조류 저감 대책 마련 필요

(6)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

▶ 전북지방환경청 ◀

(1) 새만금호 수질 측정 방식 개선 필요

(2) 새만금 방조제 환경감시단 투입 필요

(3) 새만금 범람에 대비한 치수대책 검토 필요

▶ 금강홍수통제소 ◀

(1) 댐 관련 긴급조치 명령 발령 기준 개선 필요

▶ 한국수자원공사◀

(1)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용역 관련 용역사-수공 간 사전협의 문제

(2) 새만금 조력발전소 설립 추진 위한 세부적인 연구용역 필요

(3) 대암댐 롯데그룹 별장 국유지 불법점유문제 해소 필요

(4) 2020 홍수피해 조속한 보상 필요

(5) 송강생태하천 복구공사 관련 허가조건 위반 여부 조사 필요

주요 감사 실시내용

- (6) 수상태양광 환경성, 경제성 확보 필요
- (7) 영주댐지사 직원 갑질 문제 대응 필요
- (8)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재검토 필요
- (9) 성과와 괴리된 경영평가결과에 대한 해명 필요
- (10) 스마트 관로 시설정보 인식체계 사업 재원 배분 현실화 필요
- (11) 기상청과의 협업 위한 수자원공사 기상 관련 역량 확보 필요
- (12) 부정당업자와의 계약 체결 문제 재발 방지 필요
- (13) 댐 수몰지 내 미보상 사유지에 대한 보상 자료 확보 필요
- (14) 진행예정인 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필요
- (15) 도시 홍수 대응 시스템 선진화 필요

▶ 한국환경공단 ◀

- (1) 층간소음문제 해결 대책 마련 필요
- (2) 악취 민원 해소 위해 예산 및 인력확충 필요
- (3)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임명 부적정
- (4) 부안군 상수도 현대화 사업 부실 대책 마련 필요
- (5) SRF 품질검사 및 적재 관리 철저히 할 필요
- (6)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대책 마련 필요
- (7) 악취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 (8)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확대에 의한 문제 대응 필요
- (9) 중소기업 제한경쟁 미실시 문제
- (10) 영농폐기물 수거·운반 과정 부정행위 방지 필요
- (11) 굴뚝 TMS 설치 확대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 필요

▶ 국립공원공단 ◀

- (1) 국립공원 내 불법 벌목 문제 대책 마련 필요
- (2) 지리산 국립공원 내 침엽수림 훼손지역의 탐방로 정밀조사 필요

주요 감사 실시내용

- (3) 헬기 노후화 문제 해결 필요
- (4) 설악산 흘림골 탐방로 안전 정밀조사 실시 및 낙석위험 탐방로 폐쇄 필요
- (5) 국립공원 내 생태 통로 관리 필요
- (6) 자연보전지구 내 부적절 시설 문제 해결 필요
- (7) 직원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운영 비용의 전액 공단 부담 검토 필요
- (8) 사무소 근무환경 개선 필요
- (9) 국립공원공단 직원 기강 확립 필요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 (1) 폐기물 혼합반입 검사의 실효성 확보 대책 마련 필요
- (2) 제3-1매립장 포화에 따른 매립지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3) 하수슬러지 처리 대책 마련 필요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1) 내부 비리 및 부정에 대한 자체 혁신 방안 마련 필요
- (2) 제강슬래그의 환경표지제품 인증 기준 강화 필요
- (3) 환경정보공개제도 운영 개선필요
- (4) R&D 심사 과정 및 사업 선정 적절성 여부 검토 필요
- (5) 미래환경산업융자 대면 간담회 시행 문제
- (6) 환경표지인증제도 운영 정상화 필요

▶ 국립생태원 ◀

- (1) 대장동 난개발로 인한 멸종위기종 서식지 훼손 문제
- (2) 금강하구둑 외부조사원 사망 사고 대책 마련 필요
- (3) 양산 사송지구 공사 이행조치 문제

주요 감사 실시내용

- (4) 우포늪 생물 집단 폐사 문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 (5) 생태원 소속 수의사의 인력 증원 및 처우개선 필요
- (6) 국가 단위 장기적 생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필요

▶ 상하수도협회 ◀

- (1)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 운영 철저한 관리 필요
- (2) 일부 회원사 담합에 대한 강력한 대응 필요

2)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 감사 실시내용

▶ 고용노동부 본부 ◀

【조직·인사·재무 등 일반사항】

- (1) 고용노동부 백서 및 공공데이터의 적정한 관리 필요
- (2)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제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

【고용 부문】

- (1)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화 방안 마련 필요
- (2)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실효성 제고 필요
- (3) 전일제 환산 고용률 및 장시간 일자리 감소 원인에 대한 분석 필요
- (4)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 필요
- (5) 고용안정사업의 부정수급 대책 마련 및 환수율 제고 필요
- (6) 코로나19 대응 사업들에 대한 점검 및 성과평가 필요
- (7) 공정한 채용절차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 (8) 지역 주도형 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인센티브 구조 검토 필요
- (9) 모성보호제도의 정확한 실태파악 필요
- (10) 직장 내 성희롱 처벌 사각지대 개선 필요
- (11)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 명단공표제도 개선 필요
- (12)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 (13) 일자리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고용통계 개선 필요
- (14) 고용노동 교육 사업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담당 필요
- (15) 기후위기 대응 등에 따른 일자리 감소 문제 대응 필요
- (16)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을 위한 정부 지원 필요
- (17) 한국판 뉴딜 추진에 따라 축소되는 일자리의 명확한 추계 필요

주요 감사 실시내용

- (18) 농촌 인력난 해소 방안 마련 필요
- (19) 고용안정자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예규 개정 필요
- (20) 퇴직연금 제도 개선 필요
- (21) 공공취업지원서비스 평가 체계의 개선방안 마련 필요
- (22) 고용형태 공시제도 개선 필요
- (23) 유급휴일에 대한 이원화된 행정해석 보완 필요
- (2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결과 환류 기준 명확화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 (25) 사업 재원을 확보하기 전에 사업을 집행하지 않도록 할 것
- (26) 고용보험 사업 개편 검토 필요

【노동 부문】

- (1)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새로운 노사관계 모델에 대한 연구 필요
- (2) 취업규칙 신고제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
- (3) 비정형 근로자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필요
- (4) 스포츠협회를 대상으로 주 52시간제 도입 여부 및 편법 행위 발생 여부 조사 필요
- (5) 방송연기자 근로 여건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필요
- (6) 스타벅스코리아 취업규칙에 대한 조사 필요
- (7) 외국인 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 (8) 행정기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제도개선 필요
- (9)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필요
- (10) 다양한 형태의 노동에 대한 보호 제도 마련 필요
- (11)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관련 이행상황 점검 필요
- (12) 콜센터 노동자 건강권 보호 방안 마련 필요
- (13) 공공부문 용역·민간위탁 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 필요
- (14)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주요 감사 실시내용

- (15) 최저임금을 근로장려세제로 보완하는 방안 검토 필요
- (16) 불안정한 노동 환경에 있는 방문점검노동자 보호방안 마련 필요
- (17) 감정노동자 보호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노사협력 및 공공노사 부문】

- (1) 노조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필요
- (2) 노조 활동에 대한 SPC그룹의 부당 개입에 대하여 조치 검토 필요
- (3) 노조의 불법 행동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처 필요
- (4) MZ세대의 합리적 요구에 맞는 노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필요
- (5) 하림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의혹 조사 필요
- (6) 택배노조와의 교섭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등 문제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7) 택배 노동 관련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한 노력 필요
- (8) 삼성화재 평의원협의회 노조 설립 절차 점검 필요
- (9)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관련 조치 검토 필요
- (10) 배송기사 단체행동권 침해 계약에 대한 조사계획 수립 필요

【근로기준 부문】

- (1) 쿠팡의 쪼개기 계약, 과로사 및 주 52시간제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조사 및 근로감독 필요
- (2) 샤넬코리아의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 필요
- (3) 삼성물산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필요
- (4) 신안 염전 인권침해 사건 관련 특별근로감독 필요
- (5) 남양유업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 특별근로감독 필요
- (6) 패스트푸드점 근로감독 확대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 마련 필요

주요 감사 실시내용

- (7) 카카오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필요
- (8) 항공보안파트너스의 특정 노조 지원 등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필요
- (9) IT 업종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 및 특별근로감독 필요
- (10)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필요
- (11)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에 대한 자체조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12) 근로감독 권한의 시·도지사 공유 방안 검토 필요
- (13) 불법파견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
- (14) 체당금 회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15)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체당금 회수를 위한 근로복지공단 인원 충원 필요
- (16) 근로시간의 유연성 도모 필요
- (17) 5인 미만 사업장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필요
- (18)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으로 하는 방안 검토 필요
- (19)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조사·감독 필요
- (20) 특별근로감독 결과 공표 기준 마련 필요
- (21) 근로감독제도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22) 청소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대책 마련 필요
- (23)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지원 확대 검토 필요
- (24) 중소병원 교대근무 간호사 관련 근로감독 필요
- (25) 패션 어시스턴트 노동자 관련 근로감독 필요
- (26) 근로감독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 파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감독 현황 파악 필요
- (27) 스타벅스코리아에 대하여 근로감독 실시 필요
- (28) 근로감독 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필요

주요 감사 실시내용

【산재예방 및 보상 부문】

- (1)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 확립을 위한 제도 정비 필요
- (2) 현행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재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 (3) 특별근로감독 시정조치 확인 절차 점검 필요
- (4) 학교급식실 노동환경 개선 필요
- (5) 학교 영양교사의 산업안전 관련 업무범위 개선 필요
- (6) 학교급식 및 요양병원 돌봄 담당자 등의 집회 참여에 따른 코로나 확산 방지 관리 필요
- (7) 공공기관 산업재해 증가 원인 분석 필요
- (8) 건설 추락사고 방지대책 의무화 여부 확인 필요
- (9) 소형 타워크레인의 불법 운용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
- (10) 조선업 중대재해 예방대책 마련 검토 필요
- (11) 현대HCN 외주업체 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 필요
- (12) 태영건설 근로감독 결과 점검 필요
- (13) 발전소 산업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14) 배달라이더에 대한 보호 강화 필요
- (15) 배달종사자 재해 조사 및 안전관리의무 점검 방안 마련 필요
- (16) 현장실습생 산재사고 재발 방지대책 수립 필요
- (17) 중대산업재해의 수사권을 근로감독관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필요
- (18)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제도의 실효성 강화 필요
- (19) 건강관리카드 제도 개선 검토 필요
- (20) 국민적 관심도가 낮은 사업장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
- (21) 산업안전 감독·수사분야와 기술분야 교육의 이원화 검토 필요
- (2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필요
- (23) 업무상 질병 산재 판정 통계 인프라 구축 필요

주요 감사 실시내용

- (24) 뇌심혈관 질환의 지역별 산재 승인률 편차 개선방안 마련 필요
- (25) 태아의 산업재해를 보호하는 법안 마련 필요
- (26) 업무 연관성이 높은 경우 산재 승인절차 개선 필요
- (27)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확대 필요
- (28) 산재위로금 지급 금액 적정성 및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 조사 필요
- (29) 산재위로금 등이 뇌물·증여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마련 필요
- (30) 야간 일용근로자 건강진단제도 개선 필요

▶ 중앙노동위원회 ◀

- (1) 구제명령 이행률 제고와 이행강제금 제도 개선 필요
- (2) 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신뢰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3)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명령 이행 여부 파악 필요
- (4) CJ대한통운의 사용자성 인정 결정에 따른 혼란 최소화 필요
- (5) 노동위원회 위원 제척 관련 개선방안 마련 필요
- (6) 한국경륜선수노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의 충실한 심사 및 결과 보고 필요
- (7) 노동위원회 심판에 대한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8) 노동위원회 윤리강령 위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필요
- (9) 방송작가의 근로자성 인정 관련 동일한 기준 유지 필요

▶ 최저임금위원회 ◀

- (1) 최저임금 내·외국인 차등적용 관련 해외사례 조사 필요
- (2) 초단시간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주요 감사 실시내용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 (1) 삼성화재 평의원협의회 노동조합 설립신고 교부 과정 조사 필요
- (2) SBS 단체협약 해지 통고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한 철저한 지도 필요
- (3)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 필요
- (4) 세브란스병원 발생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조사 필요
- (5)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발생한 노조 탄압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특별근로감독 필요
- (6) 청사 불법 점거에 대한 엄정 대처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필요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 (1) 취업규칙의 노동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심사 필요
- (2) 배송기사의 단체행동권 침해 계약에 대하여 검토 필요
- (3) KPGA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에 대하여 근로감독 실시 필요
- (4)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당노동행위 관련 사건에 대한 엄밀한 조사 계획 수립 필요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

- (1)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개선책 마련 필요
- (2)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및 공직기강 확립 필요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

- (1) 시정명령 이행 여부 확인 절차 및 방법 개선 필요
- (2) 대성에너지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및 CCTV 설치 등과 관련한 조사 및 조치 필요
- (3) 구미 KEC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 필요

주요 감사 실시내용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 (1) 현장실습생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조사 실시 필요
- (2) 해남 화원농협과 문내농협에 대하여 근로감독 필요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 (1) 현대제철의 불법파견, 노조활동 방해 문제에 대하여 특별근로감독 필요

▶ 공공기관 공통 ◀

- (1)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모니터링 및 결과에 따른 적정 조치 필요

▶ 근로복지공단 ◀

- (1) 체당금 오지급에 대비한 인력 확보 및 회수절차 관련 제도 마련 필요
- (2) 업무상 질병 산재 승인 관련 개선방안 마련 필요
- (3) 소음성 난청 재해 판단지침 개선 필요
- (4) 과로사 산재 심사 시 종합적으로 요인을 고려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 필요
- (5) 학교급식실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로 인한 산재 신청 시 조속한 인정 필요
- (6)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채용비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 필요
- (7)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관련 산재 판정기준 마련 필요
- (8) 산재 심사의 일관성 및 공정성 제고 필요
- (9) 시설 및 장비 노후화 대책 마련 필요
- (10) 무기계약직, 공무원노동자 등에 대한 처우 개선 필요
- (11)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 시 불법 사무장병원 제외 방안 마련 필요
- (1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제도 보완 필요

주요 감사 실시내용

- (13)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노력 필요
- (14)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필요
- (15) 건설기계조종사의 보험료 이중부과 문제 개선 필요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1)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개선 필요
- (2)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의 보완 및 강화 필요
-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4) 난임 유급휴직 사용 활성화 노력 필요
- (5) 위험성평가 사업 내실화 필요
- (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인력의 조속한 배치 필요
- (7) 근로자건강센터 운영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8)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제도 개선 필요
- (9) 여성 건설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방안 마련 필요
- (10)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노력 필요
- (11) 산재 관련 R&D 예산 확보방안 마련 필요
- (12) 당초 기부금 마련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필요

▶ 한국산업인력공단 ◀

- (1) 중소기업 직업훈련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
- (2)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3) 코로나19 확진자 등에 대한 시험응시 제한 규정 개선방안 마련 필요
- (4)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노력 필요
- (5) 외국인근로자 관련 보험제도 개선 필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1) 장애인고용의무 사업장의 장애인 허위 채용 실태조사 필요

주요 감사 실시내용

- (2)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의 장애인차별 등에 대한 감독 강화 필요
- (3) 트루컴퍼니 포상제도 개선 필요
- (4) 근로지원인 제도의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5)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의 임금 수준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6) 장애인고용컨설팅 사업 대상 확대 필요
- (7) 장애인고용교육원 설립 검토 필요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

- (1) 한국폴리텍 운영 관련 인력채용 방식 개선 등
- (2)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편 검토 필요

▶ 노사발전재단 ◀

- (1) 난임 유급휴직 사용 활성화 노력 필요
- (2)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노력 필요

▶ 건설근로자공제회 ◀

- (1) 난임 유급휴직 사용 활성화 노력 필요
- (2) 건설근로자 취업지원 사업 확대 필요
- (3) 건설근로자에 대한 교육운영 방식 개편 필요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 (1) 사회적기업 인재개발원 설립 검토 필요
- (2) 난임 유급휴직 사용 활성화 노력 필요

▶ 한국잡월드 ◀

- (1) 난임 유급휴직 사용 활성화 노력 필요
- (2) 한국잡월드 휴관일 변경 검토 필요

주요 감사 실시내용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

- (1) 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전문교육 확대 필요
- (2) 취약노동계층 및 사업주 대상 노동인권교육 강화 필요

3) 기상청 소관

주요 감사 실시내용
▶ 기상청 본부 및 소속기관 ◀
【기상예보 정확도 제고 및 기상서비스 개선 관련 사항】
(1) 기상청앱(날씨알리미) 운영 개선 필요
(2)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의 예보 정확도 개선 필요
(3) 지진 조기 현장경보 제공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 필요
(4) 도로기상정보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필요
(5) 재난 위기경보 전달체계 개선 필요
(6) 예보 관련 용어 명확화 필요
(7) 야외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폭염 영향예보 개선 필요
【기상 장비 및 기상 인력 관련 사항】
(1) 기상관측장비 관리 강화 필요
(2)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상관측시설 관리 체계 개선 필요
(3) 라디오존데 국산화 지원 계획 마련 필요
(4) 천리안위성의 장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필요
(5) 기상관측시설에 대한 조속한 등급 부여 필요
(6) 기상관측선 확충 방안 마련 필요
(7) 지방청의 기상관측장비 및 기상인력 확충 필요
(8) 예보관 정원 확대 등 역량 강화 방안 마련 필요
(9) 예보관 교대제 방식 재검토 필요
(10) 동두천 관측소 인력 배치 필요
【기상행정 및 감시, 감독 관련 사항】
(1) 갑질 공직자에 대한 제재와 처벌 강화 필요
(2) 내부청렴도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3) 자체평가의 신뢰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주요 감사 실시내용

- (4) 기상청 공무원의 행동강령 준수 필요
- (5) 기관 운영업무 처리 매뉴얼 점검 필요
- (6)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임명 부적절

【기타 사항】

- (1) 기상청의 철저한 이전 계획 수립 필요
- (2) 기후 변화에 따른 생태 변화 연구 협력 필요
- (3) 인공강우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 필요
- (4) 기상지진장비인증센터 이전 건립 사업의 철저한 집행 관리 필요
- (5) 국립기상박물관의 홍보 강화 및 장애인 접근성 제고 필요
- (6) 기상관련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7) 슈퍼컴퓨터의 경제적 활용 방안 마련 필요
- (8) 지진 발생 및 화산 폭발 대비 안전교육 및 홍보 강화 필요
- (9) 백두산 폭발 대비 남북 공동연구 필요
- (10) 기상청 포털의 기상 용어 정비 필요
- (11) R&D사업의 성과 제고 필요
- (12) 기상청장의 탄소중립위원회 참여 필요
- (13)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필요
- (14) 전북기상과학관 건설 예산 추가 반영 필요

▶ 국립기상과학원 ◀

- (1) 신규 장비 구입 시 구체적인 운영계획 수립 필요
- (2) 연구사업의 현업 반영 강화 필요

4)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관

주요 감사 실시내용

- (1) 산재예방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역할 제고 필요
- (2) 이행점검위원회 인원 충원 및 역할 제고 필요
- (3)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구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4)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 필요
- (5)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 필요
- (6) 계층별위원회의 역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7)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논의 추진 필요
- (8) 포스코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악용 방지를 위한 역할 필요
- (9)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신속한 심의 절차 진행 필요
- (10) 개별사업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근로시간면제 심의 필요
- (11)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빅데이터 구축 및 관련 연구 필요

8.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 환경부 소관

▶ 환경부 본부 ◀

【공통사항】

(1) 환경부 국정과제 이행 관리 강화 필요

-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대책, 미세먼지 대책 등 성과가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이행관리를 강화할 것

(2)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혜자에 대한 인사 조치 검토 필요

- ▷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나왔으나, 여전히 직권 남용으로 인해 채용 특혜를 얻은 임원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인사 청탁에 연루된 임원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검토할 것

(3) 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 등의 방만경영에 대한 조치 필요

- ▷ 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분담금 수천 억 원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업무 차량을 자가용으로 이용하는 등 방만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을 국회 통제를 받는 한국환경공단

등의 기관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

(4) 환경부 인사 특혜 문제 해결 필요

- ▶ 환경부 산하기관 12곳 중 7개 기관에 임명된 24명의 인사가 환경 관련 경력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업무 관련 전문성이 보증되지 않은 사람이 주요직위에 임명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인사 관리를 강화할 것

(5) 섬진강 유역 환경청 신설 필요

- ▶ 섬진강 수해 재발 방지를 위해 전담 환경청을 신설해달라는 지역 주민 및 지자체의 요청이 있으므로, 섬진강 유역 환경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6) 자동차 환경협회 위탁 업무 관리 소홀 문제 대응 필요

-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관련하여 전기차 충전기 납품회사가 충전기 점검 업무를 같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조기폐차 성능검사 사업을 협회가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약 관리 소홀, 기강 해이 및 갑질 행태도 파악되었으므로, 협회의 업무 조정 및 고발을 검토할 것

(7) 환경 정보시스템 플랫폼화 필요

- ▶ 환경부가 운영하는 대국민 웹사이트의 이용률이 저조하고, 이용자 중심의 데이터 개방 방식이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환경부가 선제

적으로 시민 참여가 가능한 환경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환경 정책 수립에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8) 환경부의 공직기강 개선 필요

- ▷ 환경부 소속 공무원이 소관 법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허위 답변을 하거나, 4대강 보 해체 관련 간담회 자료를 미제출하는 등 국정감사 관련 자료 요구에 대해 불성실하게 대응하는 행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담당 공무원의 징계 등 환경부의 공직기강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9) 녹색건축 인증 기준에 조류충돌 저감 관련 사항 반영 필요

- ▷ 조류충돌 저감을 위해 국토부, 도로공사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녹색건축 인증 기준에 조류충돌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도록 노력할 것

【녹색전환 부문】

(1) 시멘트 제조업 규제 강화 및 통합허가 대상에 포함 필요

- ▷ 시멘트 소성로에서의 폐기물 소각으로 인해 질소산화물·암모니아 등 대기오염 물질 및 중금속 잔여물이 다량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멘트 업종을 통합허가 대상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시킬 것

(2) 시멘트 소성로 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필요

- ▷ 대기오염 물질의 위해성을 고려하여 시멘트 소성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기타 폐기물처리시설의 허용기준인 50ppm과 비슷한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3) 시멘트 자재 중금속 폐기물 사용 규제 필요

- ▷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는 중금속 함유량이 높아 중금속 비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멘트 자재 중금속 폐기물 사용을 규제할 것

(4) 녹색산업 분류체계(K-택소노미) 도입 시 산업계와의 조율 필요

- ▷ 현재 산업계와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K-택소노미 도입이 늦어지고 있고, 그동안 발행된 녹색채권 중 일부만이 녹색채권으로 인정되어 녹색 금융시장을 경직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지원책 및 그린워싱 방지책 등 산업계와 조율 방안을 마련할 것

【자연보전 부문】

(1) 불법 성토로 인한 파주지역 생태계 훼손 문제 해결 필요

- ▷ 파주 민통선 지역은 멸종위기종이 많아 생태계 보전 필요성이 높은 지역이나 불법 성토로 인하여 생태계 파괴 문제가 발생하였는 바, 생태서비스 홍보·전문 역량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2) 산림 관련 사무에 대한 환경부의 적극적 참여 필요

- ▷ 자연보전 관련 사무를 관장하는 환경부는 산림청의 별목 계획 등을 논의하는 민간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숲가꾸기와 관련하여 산림청과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

(3) 새만금 신공항 부지의 야생조류 충돌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 새만금 신공항 예정지인 수라갯벌에 야생조류와 비행기의 충돌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영향평가서에서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4) 새만금 신공항 건설 결정 부동의 필요

- ▷ 인근 군산공항의 이용률이 저조하고 철새 핵심 기착지인 수라갯벌의 보전 가능성이 큼에도 관련 적정성 검토가 미흡했는 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고려하여 새만금 신공항 신설에 대해서 부동의 검토할 것

(5) 환경영향평가제도 내실화 필요

- ▷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법위반 사례들이 많고 거짓·부실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환경영향평가 정보시스템에서 검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 검증 과정에서 재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며, 전문인력 양성을 하고 독립기관공탁제 및 자연자원총량제를 추진하도록 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

(6) 대장동 환경영향평가 관련 의혹 해소 필요

- ▷ 대장동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생태현황조사 시 해당 지역이 맹꽁이 서식처라는 사실을 성남시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있고, 환경피해방지 조치계획서와 관련한 공문서 위조 의혹이 있으며, 이의신청 없이 생태자연도 1등급을 해제한 것은 대장동이 유일하고 이례적인 바, 대장동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

(7) 유기 야생동물 보호·관리 강화 필요

- ▷ 야생동물 사육·전시시설이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관련 제도 및 규정이 미흡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시설폐업으로 야생동물의 유기·탈출 위험도 커지고 있으므로, 유기 야생동물을 수용하기 위한 선제적인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지자체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할 것

(8) 반달가슴곰 보호 대책 마련 필요

- ▷ 하동군, 산림청과의 협의를 통해 반달가슴곰 서식처가 위치해 있는 지리산 형제봉 일원을 국립공원 구역에 편입하고, 반달가슴곰 자연·증식학습장을 확충하며, 제2차 반달가슴곰 복원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반달가슴곰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9) 사육곰 불법 증식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 응답 채취를 위한 사육곰 불법 증식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사육곰의 보호·관리를 위해 추가적인 생추어리 조성, 사육시설의 법적 기준 준수 여부 감독, 사육곰과 관람용 곰의 격리 보호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10) 아프리카 돼지열병 살처분 시 렌더링 방식 확대 필요

- ▷ 아프리카 돼지열병 살처분 시 사체 처리는 표준행동지침(SOP)에 따르면 렌더링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매립 방식이 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렌더링 방식 이용을 확대할 것
- ▷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시 방역대는 긴급행동지침(SOP, 농식품부 소관)에 따르면 반경 10km에 해당하나, 지난 8월 홍천 양돈농장 ASF 발생의 경우 인제와의 경계 지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하였음에도 방역대 설정 외에도 홍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방역조치가 설정됨에 따라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되었는바,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역대 설정 및 방역조치를 설정함에 있어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및 관할 지자체와 적극 협

의할 것

【자원순환 부문】

(1) 민간소각장에 대한 TMS 설치 의무화 및 주민 감시체계 법제화 필요

- ▷ 민간소각장과 공공소각장 수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위반 건수는 민간소각장이 4.2배 더 높으므로, 공공소각장에 준하는 감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민간소각장에 TMS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 및 주민 감시체계 법제화를 검토할 것

(2) 투명 페트병 재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 지난 12월부터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투명 페트병의 분리배출이 의무화되었으나, 실제 수거 및 선별 과정에서 투명 페트병과 일반 플라스틱 병이 혼합되는 사례가 많아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으므로, 투명 페트병 선별시설 구축을 지원하는 등 투명 페트병의 수거 및 선별을 개선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3) 플라스틱 인조 꽃 수입 축소 방안 마련 필요

- ▷ 플라스틱 인조 꽃이 매년 2천 톤 이상 수입됨에 따라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을 증가시키고 화훼 농가에도 타격을 주고 있으므로,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플라스틱 인조 꽃의 수입을 축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4) 불연물 사전 선별처리 제도의 조속한 시행 필요

- ▷ 환경부는 2019년 2월 소각시설로 반입되는 폐토사 등 불연물을 사전 선별처리하여 처리량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소각시설의 허용 용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에도 현재까지 미이행하고 있는바, 소각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불연물 사전 선별처리 제도를 조속히 시행할 것

(5)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선별 효율화 방안 마련 필요

- ▷ 선별 작업 중 재활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폐기물 규모가 상당하며 선별 작업 또한 대부분 수작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고도화된 폐기물 선별 시설을 설치하거나 특정 폐기물의 경우 판매자가 직접 수거하도록 하는 등 재활용 대상 폐기물 선별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 손선풍기 등에 포함되어 있는 리튬이온 건전지는 화재 위험이 크므로, 제품에 포함된 건전지 등의 분리배출 방법을 국민들에게 홍보할 것
- ▷ 월룸, 오피스텔 등에서의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분리수거 시설을 확충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6) 담배꽂초의 수거 및 재활용 대책 마련 필요

- ▷ 담배꽂초의 경우 필터에 미세플라스틱이 함유되어 있어 환경오염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업계와 협의하여 담배꽂초의 수거 및 재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7) 익산시 폐석산 오염사고의 책임 소재 재검토 필요

- ▷ 익산시 폐석산 오염사고와 관련하여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처리 업체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환경부 및 익산시에 대한 제재 없이 오염사고의 책임이 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주물 업체들에게 전적으로 전가된 측면이 있으므로, 오염사고의 책임 소재를 재검토하고 주물 업체들의 원상복구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8) 제강슬래그의 유해성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 새만금 육상태양광 공사현장에 도로 기층재로 반입된 제강슬래그에서 발생한 침출수는 강알칼리성일뿐만 아니라 유해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어 유출 시 토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현장 관리를 강화할 것
- ▷ 폐기물공정시험 방법에 부식성(PH) 검사를 추가하고 토양오염물질의 측정을 위한 시험 방법을 반영하는 등 도로 기층재 등 매립용도의 제강슬래그에 대한 재활용 기준과 환경표지제품 인증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9) 자가진단 키트의 처리 대책 마련 필요

- ▷ 코로나19 자가진단 결과 양성이거나 위음성인 경우에 해당 자가진단 키트를 생활폐기물로 처리할 경우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으므로, 자가진단 키트를 지정폐기물로 처리하도록 하는 등 안전한 처리 대책을 마련할 것

(10) 흡수패드의 위해성 방지 방안 마련 필요

- ▷ 식품의 물기 등을 흡수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흡수패드로 인하여 식품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다량으로 검출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흡수패드의 시장 유통 현황에 대한 조사 및 위해성 평가를 기초로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위해성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

(11)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 강화 대책 마련 필요

- ▷ 서산오토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사례와 같이 주민들에게 동의 를 받은 내용과 달리 폐기물의 반입 범위를 확대하거나, 매립이 종료된 후에 고의 폐업·부도를 통하여 사후관리 책임을 회피하 는 등 산업폐기물 처리의 민간 위탁에 따른 공공성 훼손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권역별로 공공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하거 나 공공성의 관점에서 위탁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12) 소각시설 활용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 현행 법령 상 소각시설 활용률이 일 단위로 130%를 초과할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어 소각시설의 적극적 운영이 어려운 측면 이 있으므로, 소각시설 활용률의 상한을 주 또는 월 단위로 유연 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3) 시멘트의 안전관리기준 마련 필요

- ▷ 시멘트 생산 시 폐기물이 투입됨에 따라 시멘트에 독성물질이 다

량으로 포함되고 있으므로, 시멘트의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시멘트를 재활용품으로 분류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4) 다회용 컵 사용 허용과 관련된 지침 정비 필요

- ▷ 코로나19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다회용 컵 사용을 허용하도록 한 지침과 관련하여 해석 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교차감염의 확산을 방지한다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과학적 기준에 따라 관련 지침을 정비할 것

(15) 폐배터리 안전관리 대책 마련 필요

- ▷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전기차 폐배터리 누적 발생량이 2035년 146만 개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회수·해체·보관의 안전성 확보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과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
- ▷ 전기이륜차 폐배터리는 중금속이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음에도 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재활용 업체가 아닌 사설 업체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회수 등을 통한 폐배터리의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

(16) 비산재에 대한 위해성 조사 실시 필요

- ▷ 생활폐기물 소각재 중 비산재는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음에도 최근 5년 간 그 위해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비산재를 재활용하고 있는 소각시설들을 대상으로 위해성 조사를 조속히

실시할 것

- ▷ 생활폐기물의 매립 축소를 위하여 비산재의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확대할 것

(17) 재난폐기물 처리 보조금의 집행 관리 강화 필요

- ▷ 구례군에서 수해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지원된 보조금을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전용하는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으므로, 보조금의 집행 관리를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
- ▷ 이와 관련하여 구례군에서 내부문서 유출 혐의로 공익 제보자를 고발 조치하였는바, 공익 제보자에게 불이익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환경부 차원에서 점검할 것

(18) 태양광 폐패널의 적정 처리 대책 사전 준비 필요

- ▷ 재생에너지 발전의 비중 확대에 따라 향후 대규모로 태양광 폐패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태양광 폐패널에는 다량의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어 매립 시 환경오염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전에 적정 처리 대책을 준비할 것

(19) 병입 수돗물의 생산·사용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 지방자치단체에서 플라스틱 재질의 병입 수돗물을 생산·사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플라스틱 재질의 병입 수돗물을 생산·사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

련할 것

(20) 배달용 1회용기 사용 억제 대책 마련 필요

- ▷ 배달용 1회용기 사용 증가로 플라스틱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다회용기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적극적인 1회용기 사용 억제 대책 및 다회용기 사용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대기보전 부문】

(1) 시멘트 공장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 철저한 적용 필요

- ▷ 시멘트 공장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 기준을 2015년 이후 건축물에 대해서 강화하였으나 기존 건축물 증축을 통해 강화된 배출 허용 기준을 회피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강화 및 선택적촉매환원설비(SCR) 설치 유도를 위한 보조금 지급 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2) 시멘트공장 SCR 용자 제도 개선 필요

- ▷ SCR 설치 유도를 위해 용자를 받은 시설들이 실제로는 SCR설치와 관련성이 떨어져 SCR 설치 유도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SCR 용자 제도를 개선할 것

(3) 광양만 근처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대책 필요

- ▷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하여 남해군 및 하동군의 대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단계 건강영향조사에서 남해와 하동을 제외하는 등 광양만 근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이 부실하므로 광양만 근처의 환경오염 방지 및 피해대책을 마련할 것

(4) 포스코 굴뚝 TMS 설치 관리 및 노동자 직업병 문제, 주변 시민들의 영향 등 대책 마련 필요

- ▷ 포스코의 배출구 중 TMS(오염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된 것이 4%

에 불과하고 초과배출 행정처분도 5건이나 있음. 포스코 노동자들의 심각한 직업병 문제, 주변 거주 시민들에 대한 영향, 수재슬래그 침출수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포스코의 배출량 감소를 위한 관리 감독 및 민관 협의체 요구안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

(5) 상위 20개 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배출량 보도 필요

- ▷ 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들의 배출량에 관한 자료 공개가 미흡하므로 TMS 측정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시스템 운영 이외 매년 운영상황을 평가한 분석 자료를 내도록 할 것

(6) GHP 인증절차 도입 필요

- ▷ 저감장치를 부착한 GHP(가스엔진구동 냉난방기)를 배출시설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한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GHP의 사후 관리 미흡으로 유해 가스의 배출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엄격한 인증절차 및 배출가스 성능 보증기간을 도입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

(7) GHP 배출허용기준 재조정 필요

- ▷ GHP의 배출허용기준이 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한 GHP 배출 기준값에 비하여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으므로 배출허용기준을 재조정할 것

(8) 양방향 전기집진기 오존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책 필요

- ▷ 2019년 지하철 터널 미세먼지 저감사업 시행 후 양방향 전기집진

기가 전국 지하철 구간에 설치되었으나 전기집진기에서 오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9) 산업밀집지역 초미세먼지 농도 완화 대책 필요

- ▶ 충남, 인천 등 산업 밀집 지역의 경우 제1차,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감소하지 않고 있으므로 제3차 계절관리제 시행 시에는 산업밀집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완화에 집중할 것

(10) 친환경차 보조금 사업 운영 관리 필요

- ▶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친환경 자동차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태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의무운행기간을 늘리는 등 친환경차 보조금 사업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할 것

(11) 대기오염총량제 엄격히 시행 필요

- ▶ TMS 설치 기한을 유예하거나 배출허용총량 할당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대기오염총량제 도입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배출허용총량을 축소하는 등 대기오염총량제를 엄격히 시행할 것

(12) 전기차 충전인프라 시장친화적 운영 필요

- ▶ 민간업체 제품과 달리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전기차 충전기는 고장률 집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사용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으므로 충전 인프라 구축, 급속 충전기 도입, 충전인프라의 민간 이양 및 운영 위탁 방안을 검토할 것

(13) 전기차 충전소 보조금 관리 필요

- ▷ 완속 전기차 충전 업체 중 대기업 지분이 높고, 보조금을 받은 이후 매각하여 이득을 얻는 등의 악용 사례가 있으므로 보조금 지급 조건을 검토할 것

(14) 전기차 충전기 고장 대책 마련 필요

- ▷ 충전기 고장 문제가 많으므로, 충전기 인증 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충전기 제작에 대기업이 참여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

(15) 아스콘 사업장 특정 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조정 필요

- ▷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등 특정 대기유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배출허용기준을 조정할 것

(16) 고속도로 휴게소 급속 공공 충전기 확충 필요

- ▷ 고속도로 휴게소 내 급속 공공 충전기의 숫자가 부족하여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고속도로 휴게소와 같이 급속 충전기의 필요성이 큰 지역 위주로 급속 충전기를 더 많이 배치할 것

(17) 전기차 충전 시 결제 카드 통합 필요

- ▷ 전기차 충전 시 사용하는 결제 카드가 충전기·지역·사업자마다 달라 매번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카드를 통합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기후 부문】

(1)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 관련 노력 필요

- ▷ 현행 탄소배출권거래제도와 탄소세의 병행 방안 등을 연구하고, 해외 감축분을 최소화하고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등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탈원전정책과 2050 탄소중립 정책의 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할 것

(2)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전환 및 수송 부문 관련 계획 수립 필요

-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전환부문에 있어서 신규 건설된 7기의 석탄발전소의 폐쇄 계획에 대해 조속히 결정하고, 수송부문에 있어서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계획을 수립할 것

(3) 탄소중립 관련 대국민 인식 제고 필요

- ▷ 적정 NDC 비율에 대한 산업계와 정부의 의견이 상이하고, 일반 국민의 60%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하여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산업계 및 일반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정책 협조를 유도할 것

(4) 삼척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실태 조사 필요

- ▷ 삼척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부합하지 않는데, 원주환경청에서 1단계 침식 저감시설 설치 완료 시

까지 공사 중단 명령을 했으나 설치 미완 상태에서 공사가 재개된바, 환경부는 이와 관련하여 실태 조사를 할 것

(5)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력 필요

- ▷ 석탄발전소 폐쇄 등의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실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탄소중립위원회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노력할 것

(6) 온실가스 흡수 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 수립 필요

- ▷ 환경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방안으로 수변녹지 및 생태벨트를 통한 온실가스 흡수를 제시하였으나, 관련 조사가 진행된 바가 없고 구체적인 이행방안, 비용추산 등에 대한 계획이 불충분하므로, 환경부는 관련 계획을 충실히 수립할 것

(7) 2030 NDC 달성 과정에서 산업계 타격 최소화 필요

- ▷ 2030 NDC가 35%에서 40%로 상향됨에 따라 그 이행과 관련한 산업계의 부담이 예상되므로, 환경부는 산업계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것

(8) NDC 배출량 산정 기준 통일 필요

- ▷ 2018년 총배출량 대비 203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NDC의 기준연도는 총배출량이고 목표연도는 순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어서, 기준연도를 순배출량 기준으로 통일하면 실질적으로 2018년 대비 36% 감축에 불과하므로, NDC의 합리적인 산정을 위하여 배출량 산정 기준을 통일할 것

(9) 합리적인 NDC 달성 방안 마련 필요

- ▶ 정부의 2030 NDC 달성 방안에는 아직 기술이 부족한 탄소포집 저장기술(CCUS) 및 수소환원제철기술과 국외감축량까지 포함되어 산정되었고, 이는 40% 감축 수치에 맞추기 위해 감축량을 과다 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숲 가꾸기나 내륙습지를 더 확대하는 등 합리적인 NDC 달성 방안을 마련할 것

(10) 기업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시 할당량 축소 필요

- ▶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산업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충분히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해당 기업들의 온실가스 할당량을 낮게 설정하여 배출 저감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1)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 현재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을 하고 부처는 이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어 실제 감축 목표치가 미흡한 상황이므로, 제3의 기관에서 기업들의 목표 수행 여부를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등 목표 이행체계를 확립할 것

(12) 기후대응기금 단위사업 효율적 집행 필요

- ▶ 2022년 기후대응기금 편성액 2조 5,000억원 중 1조 5,000억원은 기존 진행 사업들이고, 환경부가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들도 기후대응기금 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으므로, 환경부는 기재부와 협의하여 단위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3) 지속가능 평가보고서 공시제도의 기준 등 정비 필요

- ▷ 2025년부터 기업의 지속가능 평가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이지만, 여전히 공시 대상 및 내용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제도 시행 과정에서 혼란이 우려되므로, 공시제도 관련 기준 정비 방안 등을 마련할 것

(14) 그린뉴딜 사업 선정 부적절

- ▷ 설악산 홀림골 탐방로 사업, 스마트 그린 도시 사업 중 쿨페이브먼트·스마트 CCTV·쿨링포그와 같은 사업들이 그린뉴딜 사업에 포함되었으나, 해당 사업들은 지역 민원 사업이어서 그린뉴딜과 관련이 없으므로, 향후 사업 선정 시 유사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환경보건 부문】

(1) 페놀폼 단열재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체계적 연구 필요

- ▷ 국립환경과학원의 실내공기질 방출 오염원 연구 결과 페놀폼 단열재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 포름알데히드의 방출량이 높게 나타났으므로, 페놀폼 단열재 등 실내 건축자재와 실내공기질 오염과의 연관성에 대해 연구를 진행할 것

(2) 환경책임보험 제도 개선 필요

- ▷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화 이후 실제 보험금으로 지급된 것은 4%에 불과하고 평균 사고 조사기간도 1년이 넘어 민간보험사가 과도한 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보험제도를 개선하여 보험료 지급을 확대하는 등 실효성을 강화할 것
- ▷ 민간보험사들의 과다이익을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에 적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 환경책임보험의 직권조사 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 추진에 적극 협조할 것

(3) 미세먼지 측정기 사후관리 필요

- ▷ 미세먼지 측정기 성능 평가 결과 1등급을 받은 기기도 사후관리 미흡으로 인하여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정책효과는 낮으므로, 성능 인증 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신·증설 규제 개혁 필요

- ▶ 2019년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신·증설 관련 규제 개혁을 추진하면서 인력 및 예산액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여전히 지나치게 길고 심사기간 단축 효과는 미미하므로 이를 개선할 것

(5) 가습기 살균제 조정위원회 구성 시 피해자 참여 확대 필요

- ▶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가 출범하였으나 많은 피해자단체들이 조정 시작 단계에서부터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보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피해자단체의 폭넓은 참여가 가능하도록 할 것

(6) 천안 장산리 환경조사 및 주민건강영향 실태조사 신뢰성 확보 필요

- ▶ 천안 장산에 전선 공장 설립 이후 주민들의 질병 발병 비율이 높아졌고, 이에 따른 환경조사 및 주민건강영향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되었고 민관합동조사협의회에서도 의견 수렴이 불충분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7) 장점마을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 금강농산 오염피해 관련 장점마을 주민과 주변지역에 위치한 마을들이 서로 지역적 거리가 가깝고 환경도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주민 간에 사후조치 및 보상 과정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8) 층간소음 기준치 개선 필요

- ▷ 층간소음 기준치가 현실에 비해서 지나치게 낮고 여전히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 갈등이 많으므로, 그 기준치를 개선할 것

(9)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조사결과 공개 필요

- ▷ 2017년에 진행되었던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결과 공개가 무기한 연기되었으므로, 관련 협의를 마치고 신속히 그 결과를 공개할 것

(10) 어린이 활동공간(키즈카페 등) 실내 공기질 규제 필요

- ▷ 어린이 활동공간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어린이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키즈카페가 법률에 근거한 개선명령 대상이 아니어서 적극적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11) 포스코 광양제철소 독성물질(시안가스) 발생 문제

- ▷ 포스코 코크스 공정 과정에서 오염기준의 250~500배 정도의 시안가스가 유출되어 노동자들이 암에 걸리는 건강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포스코·환경부·노동부가 합동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 조속히 진상을 파악할 것
- ▷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하여 광양제철소에서 오염물질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오염물질이 주위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실

도 확인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주민건강조사, 대기오염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

(12) 포스코 광양제철소 독성물질 조사결과 수정 지시 문제

- ▷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2022년 1월부터 통합사업장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관할이 아님에도, 영산강청 과장이 참
고인으로 나와서 관할이라고 위증을 한 바 있음.
- ▷ 2개의 국제공인시험기관에서 동일한 시료를 분석했는데 환경공단
에서 분석한 결과값이 2배 이상 낮게 나타나고, 영산강환경청 과
장이 압력을 행사하여 독성물질 분석 결과를 열람하여 광양제철
소 슬러지에서 검출된 시안 분석 결과를 수정하는 등 환경부가
외압을 행사하여 수치 조작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외압 의혹에
대해 진상을 파악하고 개선할 것

(13) 미승인 유해 살생물제 유통 근절 필요

- ▷ 미승인 유해 살생물제가 구매대행 및 해외 직구입 경로를 통해 유통되고 있으나 환경부에서는 유통차단 권고만 할 뿐 그 유통을 막지 못하고 있으므로, 미승인 살생물제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유통을 차단할 것

(14) 공공건축물 석면 안전 정보 철저한 관리 필요

- ▷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석면 건축물 현황에는 공공건축물 인 교육부, 국방부 건물의 석면 안전관리 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국민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해 철저히 정보 관리할 것

(15) 지하철 에어컨 필터 식중독균 검출 관련 점검 필요

- ▷ 지하철 에어컨 필터에서 여러 가지 식중독균이 검출되었으나, 전철이나 버스에 대한 대중교통 공기질 관리 세부 기준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 정비 및 실태 조사·관리를 할 것

(16)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 비동물실험으로 대체 필요

- ▷ 현재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를 할 때 동물실험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동물권 침해가 큰 상황이므로, 관련 법규 개정과 비동물실험시설 구축 등을 통한 비동물실험법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

(17) 신종 화학오염물질 모니터링 지속적 추진 필요

- ▷ 신종 화학오염물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수생태계로 유입됨에 따라 환경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종 유해화학물질의 감시물질 지정 및 주기적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물관리 부문】

(1) 지방 하천 제방 관리 국고보조사업으로의 전환 필요

- ▷ 2020년 홍수 피해는 폭우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없었고, 지방 하천의 정비 비율이 너무 낮아 발생한 것이므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여 조속히 추진할 것

(2) 2020년 홍수 피해에 대한 신속·적정한 보상 필요

- ▷ 2020년 홍수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의 일환으로 조속한 피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분쟁조정 절차를 가능한 빨리 진행하고 조정 결정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
- ▷ 2020년 홍수 피해의 책임소재 및 기여도 구분을 통해 각 책임주체의 배상액 산정을 신속히 진행할 것
- ▷ 수재민들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서 기거하며 수해 기억으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 손해액이 실제 피해액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는바,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을 실시할 것
- ▷ 환경부 본부인력을 파견하여 심사관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피해주민과의 관계에서 전체적으로 책임을 인정하여 우선 신속히 배상한 다음 책임주체 간 배상액 산정 및 구상은 추후에 하도록 할 것

(3) 새만금 기본계획 수정 필요

- ▷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르면 용지별 홍수위가 200년 빈도로 산정되어 있으나 기후 변화로 인한 강수량 급증 및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침수 피해가 커지고 있으므로, 홍수위 재산정 및 배수갑문 증설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4) 4대강 자연성 회복 위한 녹조 문제 대응 필요

- ▷ 낙동강, 금강의 녹조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조류경보제 발령 기준이 느슨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고, 국제 기준과 달리 독소 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있으며, 측정(채수)지점과 취수구의 거리가 떨어져 있어 측정값과 경보의 연계성이 낮고 친수활동 구간의 개수도 적으므로, 조류경보제를 개선할 것
- ▷ 낙동강 상수원 채수 지점에 취수구 주변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은 호주 제도를 참고하였다고 밝혔으나, 호주 제도는 취수구를 기본 모니터링 채수 지점으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제도를 왜곡하여 참고했는지에 대하여 해명할 것
- ▷ 금강 농수로에서 유해성이 높은 마이크로시스틴(남조류)의 측정치가 높게 나타나는 등 녹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므로, 측정 방법 개선 및 민관 합동 TF 구성 등을 통해 녹조 대응책을 적극 추진할 것

(5)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수질오염 재발 방지 필요

- ▷ 하남 코스트코 재활용시설에서 발생한 오염수가 우수관을 통해 하

남시민들이 식수로 이용하는 하천으로 무단방류된 사태가 발생한 바, 유사한 문제가 다른 지방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6) 스마트 상수도 사업 추진 방법 개선 필요

- ▷ 스마트 상수도 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밸브 조작에 대한 담당자 교육 없이 스마트 관망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교육을 실시할 것
- ▷ 관로위치를 보조적으로 파악하는 센서부착이 적수 사태 예방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맨홀 RFID 등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분야에 예산투입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예산 편성을 고려할 것

(7)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제품 근절대책 마련 필요

- ▷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로 인한 수질 오염 문제가 심각하므로,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조속히 불법 제품 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
- ▷ 주방용 오물분쇄기로 인한 환경오염 및 하수도 부하 문제에 대하여 환경부에서 실시한 연구용역 등에 대한 공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할 것

(8) 주방용 오물분쇄기 금지방안 재고 필요

- ▷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으로 인하여 음식물처리비용이 감소하고, 오물분쇄기 금지 시 실직하는 노동자가 매우 많은 점을 고려하여, 사용 금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연구를 한 후 결정할 것

(9) 낙동강 보 상시개방 결정 재고할 필요

- ▶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수계 취·양수장 시설 이전 및 보 상시 개방에 따라 낙동강변 근처 농민들의 농사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결정을 재고할 것

(10) 팔당 상수원 수질 관리 위한 특대고시 개정 등 조치 필요

- ▶ 현재 경기도 광주 오폐 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보다 하수 유입량이 커서 적정 하수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이고, 2년 이상 증설사업이 지연되면 하수처리시설과 연결된 팔당 상수원에 수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 ▶ 팔당상수원 상류에 난개발이 되어 이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므로, 팔당 상수원 규제 관련 특대고시 제15조를 개정하여 팔당 상류지역의 개별입지 소규모 공장들을 집적화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보전 구역 용도 변경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개정안의 단서 조항을 재개정할 것

(11) 섬진강 유역 주민에 대한 섬진강댐 용수 배분 필요

- ▶ 섬진강댐을 통한 유역변경으로 섬진강의 용수량은 적은 반면 홍수기에만 대량 방류되고 있는 실정인바, 유역 주민들이 섬진강댐 용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12) 취·양수장 취수시설 개선 필요

- ▶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취·양수장의 취수구 위치를 관리수위에 맞춘

결과, 한강과 낙동강은 취수 문제로 수질 개선을 위한 개방을 할 수 없어 녹조 피해가 우려되므로, 적극적인 정책과 하천법 개정 등을 통해 현재 관리수위에 맞춰진 취수시설을 개선할 것

(13) 금강하구 해수유통 필요

- ▷ 금강하굿둑은 녹조 독성이 7000ppb에 달할 정도로 오염되었으므로 해수 유통을 통해 자연성을 회복하도록 할 것

(14) 내성천 수질·수생태계 회복을 위한 영주댐 문제 해결 필요

- ▷ 영주댐 건설 이후 시험 담수 모니터링 중간보고에 따르면 댐 건설 결과 내성천 수질·수생태계에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완전 방류, 댐 해체 등을 포함한 영주댐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

(15) 통합물관리 예산 조속히 편성할 필요

- ▷ 부산, 대구에서는 낙동강의 표류수를 상수원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낙동강 유역 산업폐수 발생량이 기타 하천에 비해 높은 편이므로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다른 취수원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편성을 포함하여 통합물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16) 수상 태양광 사업으로 인한 미세플라스틱 문제

- ▷ 풍화작용으로 인하여 수상 태양광 사업 플라스틱 지지대에서 미세플라스틱이 용출되어 인근 정수장 및 취수원 오염 가능성이 증가하였으므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17) 군남댐 보강공사 필요

- ▶ 북한에서 황강댐 수문을 열어 무단 방류를 하면 이로 인하여 수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직하류 제방 보강을 통해 수해 예방을 할 것

(18) 대청호 주변 주민들 농어촌민박 영업 허용 필요

- ▶ 대청호의 상수원보호구역이 넓어 인근 주민들에게 큰 제약이 가해지고 있으므로, 상수원 수질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 선에서 농어촌 민박 영업은 허용하는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결정을 할 것

(19) 수질오염 측정기준 TOC로 변경 필요

- ▶ 현재 수질 오염 측정 기준은 BOD, COD이나, 신종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못하거나 수질오염 예방에 한계가 있으므로 TOC를 수질 오염 측정기준으로 사용할 것

(20) 댐 건설로 수몰된 미보상 지역에 대한 적극 보상 필요

- ▶ 댐 건설로 수몰된 미보상 지역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바, 사유지의 국유화에 대한 보상이라는 관점에서 전향적인 자세로 적극적인 보상을 할 것

【소속·산하기관 공통사항】

(1) 골프장 관련 환경오염 증가에 대한 각 지방청의 관리 개선 필요

- ▷ 골프장 폐잔디·페토사 무단방치 및 농약 사용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방청의 환경오염 점검 및 적발 노력을 강화할 것

(2) 환경영향평가 독립기관 공탁제 도입 필요

- ▷ 사업 주체가 선임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들의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고 이에 대한 사후조치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되 공공기관이 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독립기관 공탁제를 도입할 것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1) 2020년 홍수 피해 보상 위해 노력 필요

- ▷ 2020 홍수피해 관련 조정 일정이 늦어지고 있으므로, 조정 일정을 개략적으로라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통지할 것
- ▷ 홍수 피해 환경분쟁을 담당하는 심사관이 4명에 불과하고 해당 사안에 대하여 신속한 집중 심리가 필요하므로, 관계 전문가를 심사관으로 위촉할 것

- ▷ 추후 조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 대기오염에 따른 농작물 피해 분쟁 처리 기준 마련 필요

- ▷ 대기오염에 따른 농작물 피해 분쟁에서 배상이 이루어진 것이 1건에 불과하고 분쟁 처리 기준이 미비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국립환경과학원 ◀

(1) 조류경보제 개선안 재검토 필요

- ▷ 조류경보제의 발령기준, 측정방법 등에 관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과학기반 정책지원에 충실하도록 철저를 기할 것

(2) 국내 전기차 주행거리 인증 개선 필요

- ▷ 동일한 전기차 차량에 대하여 환경부와 산업부 간 주행거리 인증 결과 및 기준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통일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것

(3) 폐놀폼 단열재에 대한 체계적 연구 진행 관리 필요

- ▷ 폐놀폼 단열재를 사용하는 아파트와 학교가 많으므로 폐놀폼 단열

재 등 실내 건축자재가 실내공기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할 것

(4) 수질총량관리센터 직제 용역 진행 상황 파악 및 해결방안 마련 필요

- ▷ 현재 환경과학원이 진행하는 수질총량관리센터 직제 미비 용역에 대하여 진척 정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용역 관리를 강화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 화학물질안전원 ◀

(1) 화학물질 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요령 고지 관리 필요

- ▷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들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주민 고지 제도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내실화할 것

(2)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 운영 개선 필요

- ▷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 검증 시스템 오류 발생 횟수는 2019년 1,250건으로 2015년 대비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배출량 조사 교육 참석업체가 대상 업체 중 절반에 그치는 등 제도 운영이 미흡한 바, 제도 운영 관리를 강화할 것

(3) 울산센터 드론 미사용 문제

- ▷ 울산 산단은 비행 금지 구역이어서 울산화학 재난 합동 방재센터가 구매한 드론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 드론 구매 시 드론 비행 구역 여부에 대해서 조사한 후 구매를 결정할 것

(4) 울산센터 제독 장비 활용 문제

- ▷ 고가의 제독 장비를 16대 구매했으나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1대에 불과하므로, 장비 활용 여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

(1) ASF 양돈농가 확산 방지 대책 마련

-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확산 속도가 빠르고, 향후 확산 시 대 규모 피해가 예상되므로, 광역울타리뿐만 아니라 양돈농가 중심의 울타리 설치를 병행하여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

(2) 연구직 인력 증원 필요

- ▷ 기관설립 취지 및 야생동물 감염병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연구직 인력을 증원할 것

▶ 한강유역환경청 ◀

(1) 대장동 환경영향평가 송전탑 지중화 문제

- ▶ 2015년 대장지구 환경영향평가 결과 조건부 동의 조건인 송전탑 지중화 계획 마련이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고, 송전탑 지하화 관련 민원 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있으므로, 한강유역환경청과 화천대유 협의 관련 사항들을 보고할 것

(2) 환경감시단 정원 대비 현원 총원 필요

- ▶ 한강청, 금강청 환경감시단 현원이 정원 대비 부족하여 업무에 지장이 있으므로 인원을 총원할 것

(3)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방지 대책 필요

- ▶ 대장동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주)세일엔지니어링이 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하는 등 대행업체의 법 위반 사례가 증가 추세이고, 처벌 수준도 낮아 위반이 반복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4)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재발 방지 필요

- ▶ 대장동 사건 관련 환경영향평가 결과 이행비용이 과다한 경우 이행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5) 대장동 개발 송전선로 지중화 관련 소송 적극 대응 필요

- ▷ 성남의 뜰이 제기한 송전선로 지중화 이행 과태료 부과처분 관련 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6) 특별종합대책 고시 제15조 개정 필요

- ▷ 산업단지보다 개별입지가 취수원 수질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특별종합대책 고시(특대고시) 제15조 개정을 검토할 것

(7) 수계지역 주변 토지 매각 논란 해명 필요

- ▷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해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하여 매입한 양평군 일대 용담1지구 지역은 천연기념물 서식지가 있는 등 보호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를 2019년에 매각하고 이후 아파트 건설 계획이 수립되었는바, 매각 이유를 해명할 것

(8) 지뢰폭발 사고 재발 방지 대책 필요

- ▷ 장항 습지에서 지뢰 폭발로 환경 정화 작업을 하던 인부의 발목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한강 하구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9) 사육곰 농장주 불법행위 방지 대책 필요

- ▷ 사육곰 불법 증식, 사육시설 설치기준 위반 등 사육곰 농장주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가 약하고, 규정이 미비하여 사육곰 탈

출 시 수색 비용을 환경청에서 지불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0)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부족 문제 해결 필요

- ▷ 코로나19 사태 이후 격리의료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부족하고 수도권 위치 시설들의 처리용량이 과부화된 상태이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11) 완충저류시설에 대한 환경부 차원 적극 관리 필요

- ▷ 산업단지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오염물질이 수계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완충저류시설을 현재는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보다 확실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

▶ 낙동강유역환경청 ◀

(1) 완충저류시설 설치의무 조속히 이행 필요

- ▷ 물환경보전법상 완충저류시설 설치의 의무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145곳 중 22곳만 설치되어 있으므로 조속히 해당 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것

(2) 양산 사송 공공주택개발지구 고리도룡농 서식지 보호 대책 마련 필요

- ▷ 사송 지구 공사 현장에서 고리도룡농 25,000마리가 폐사했으나, 낙동강청이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는 등 정밀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서식지 보호 대책도 수립하지 않았으며, 도룡농 구조활동도 공사 재개 때문에 중단된 상황임. 고리도룡농의 서식지 보전을 위해 환경 단체, 전문가, LH가 함께 협의하여 LH에 환경영향평가 재평가를 요구하는 등 대응 대책을 마련할 것

(3) 부산 대저대교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 허위 작성

- ▷ 부산 대저대교 공사 관련 환경영향평가서가 허위로 작성되는 등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관리를 철저히 할 것

(4) 유해화학사고 방지 위한 안전관리 전문가 컨설팅 필요

- ▷ 안전진단 결과 적합 판정이 있었던 사업장에서도 화학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진단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사업장에 안전 관리 컨설팅 전문가를 상시 배치할 것

▶ 금강유역환경청 ◀

(1) 환경범죄 방지 대책 마련 필요

- ▷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화학물질 관련 법 위반이 많으므로 환경범죄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2) 청원 북이면 주민건강 실태조사 재실시 필요

- ▷ 주변 지역에 3개의 폐기물 소각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청원 북이면 지역 주민 중 60명이 최근 10년 간 암으로 사망하였음에도 주민건강 실태조사가 부실하게 시행되어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과의 역학적 관련성이 입증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는바, 주민건강 실태조사를 합리적으로 설계하여 조사를 재실시할 것

(3) 천안 장산5리 주민건강 실태조사 계획 재수립 필요

- ▷ 천안 장산5리에 전선공장과 필름공장이 설치된 이후 암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주민건강 실태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나, 그 과정이 부실하여 지역 주민들의 불신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추가 조사 또한 5일 동안의 지역 내 일부 지점의 오염물질 농도 측정에 그쳐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에는 불충분한 측면이 있으므로, 주민건강 실태조사 실시 계획을 재수립할 것

▶ 영산강유역환경청 ◀

(1)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 관련 자가측정제도 개선 필요

- ▷ 다이옥신 배출시설 점검 결과 적발된 영산강청 관할 시설 7건 중 자가측정으로 적발된 것은 없는 것을 볼 때, 자가측정제도 운영이 미흡하므로, 운영 관리를 강화할 것

(2) 구례군 수해폐기물 처리 비용 전용에 대한 조사 필요

- ▷ 구례군이 수해폐기물 처리 보조금으로 214억원을 지원받았으나 수해폐기물에 생활폐기물을 섞어서 일괄 처리를 했다는 의혹이 있으므로,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할 것

(3) 섬진강 유역 적정 유량 확보 위한 개선책 마련 필요

- ▷ 섬진강 하천유량 부족으로 인한 하구 기수지역 염해피해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지역민 생계가 위협받고 있으므로, 섬진강 수계 댐의 적정한 환경생태유량 및 하천유지유량을 산정할 것

(4) 섬진강 수해 재발 방지위한 저류지 확보 필요

- ▷ 2020년 홍수로 인해 섬진강 일대에 피해가 컸으므로, 홍수터나 저류지와 같은 수해 방지 시설들을 확보할 것

(5) 광주하수처리장 시설개량 필요

- ▷ 영산강 수질 개선에 5조 이상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BOD는 4.4mg/L로 전국 5대 강 중 가장 나쁜 수준이므로, 영산강 수질 개선을 위해 광주하수처리장 시설을 개량할 것



(1) 쌍용 쓰레기 매립장 건설 관련 환경영향평가 문제

- ▷ 쌍용 C&E가 건설하려는 쓰레기매립장 예정 부지는 석회석 폐광으로 침출수 유출에 따른 지하수 오염 가능성이 크므로, 해당 사안을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할 것

▶ 대구지방환경청 ◀

(1) 환경전문업체 컨설팅 강권 관행 철저한 조사 필요

- ▷ 대구청 직원이 환경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체 대표에게 특정 환경업체에게 컨설팅을 받도록 강권했다는 정황이 파악된바, 해당 관행에 대해 조사할 것

(2)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 교육 참석률 제고 필요

- ▷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 교육 대상 업체들의 교육 참석률이 대구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므로, 교육 참석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3) 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 가동률 저조 관련 대책 필요

- ▷ 분양률 저조, 용량 과다 설계 등으로 인해 산단 공공폐수 시설 가동률이 50%를 밑돌고 있으므로, 관리 효율화를 위해 일반산업단지 지정권한과 산단 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승인권을 지자체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

(4)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률 저조 관련 대책 필요

- ▷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으므로, 사후조사서 실시, 관리책임자 통보 등 대책을 강구할 것

(5) 영주댐 유해남조류 저감 대책 마련 필요

- ▷ 영주댐 모니터링 결과 유해남조류가 심각한 수준이므로, 영주댐 완전 개방 등 남조류 저감 대책을 마련할 것

(6) 영풍 석포 제련소 문제

- ▷ 영풍 석포 제련소에서 오염물질 불법 배출 관련 법령 위반 건수가 많고, 유출된 중금속으로 인해 토양 오염이 심각하므로 공장 이전 등 대책을 수립할 것
- ▷ 낙동강 하천구역 점용허가 시 콘크리트 구조물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구 승인한 문제가 발견되었으므로, 점용허가에 대해 재검토를 하고 원상복구 방안을 마련할 것

▶ 전북지방환경청 ◀

(1) 새만금호 수질 측정 방식 개선 필요

- ▷ 새만금호 수질 통계에 대한 전북청과 환경부 연구용역 결과값이 다르고, 현재의 측정 방식으로는 수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

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수질 측정 방식을 개선할 것

(2) 새만금 방조제 환경감시단 투입 필요

- ▷ 새만금 공사 현장에서 제강 슬래그 침출수가 발생하고 콘크리트를 방조제 틈에 붓는 등 현장 관리 부실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환경감시단을 투입하여 점검할 것

(3) 새만금 범람에 대비한 치수대책 검토 필요

- ▷ 새만금 용지별 홍수위 기준은 100년 또는 200년 빈도 강우량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작년 전북 일대에 500년 빈도 강우량 유입으로 홍수피해가 발생한바, 지자체 기후변화적응계획을 수립할 때 기후위기 취약지역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검토의견을 제시할 것

▶ 금강홍수통제소 ◀

(1) 댐 관련 긴급조치 명령 발령 기준 개선 필요

- ▷ 현행 기준에 따르면 댐의 수위가 계획홍수위를 초과할 경우에 한하여 긴급조치를 발령하나, 효과적인 수해 방지를 위해서 계획홍수위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긴급명령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할 것

▶ 한국수자원공사◀

(1)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용역 관련 용역사-수공 간 사전협의 문제

- ▶ 2020년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용역 결과, 수해원인이 복합적이고 애매하게 기술되었음. 한국수자원공사 검토의견에 따라 결과보고서 내용이 바뀌었고, 이와 관련하여 수재민들은 용역사와 수공 간 사전협의를 통한 부정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으므로 연구용역 수행결과 내역에 대한 사전협의 여부를 명확하게 밝힐 것

(2) 새만금 조력발전소 설립 추진 위한 세부적인 연구용역 필요

- ▶ 새만금 조력 발전소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며, 새만금의 수질 문제 대처를 위해 시범 사업으로 해수유통을 진행하고 있는바, 관련 연구용역을 철저히 진행할 것

(3) 대암댐 롯데그룹 별장 국유지 불법점유문제 해소 필요

- ▶ 대암댐 인근 국유지가 50년 가까이 롯데그룹 별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무단점유 해소를 위한 정리절차를 조속히 완료할 것

(4) 2020년 홍수 피해 조속한 보상 필요

- ▷ 수자원공사는 2020년 홍수 당시 댐 관리 규정을 준수했다는 의견으로 배상책임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는바 환경분쟁 조정절차에 적극 협력하고 결과를 수용하여 홍수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한 피해배상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5) 송강생태하천 복구공사 관련 허가조건 위반 여부 조사 필요

- ▷ 송강 생태공원 하천 점용 허가 후 청송군이 대규모 복구 공사를 진행하여 청송 정원을 조성하며 무단으로 대규모 형질 변경이 있었고, 이로 인해 홍수 시 유수에 지장이 생기는 등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조사할 것

(6) 수상태양광 환경성, 경제성 확보 필요

- ▷ 수상태양광 설치 시 패널 및 부체(浮體) 소재의 채택, 패널 세척 등에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동시에, 전력 판매수익과 유지보수비용을 정확히 산정하여 경제성을 검토할 것

(7) 영주댐 지사 직원 갑질 문제 대응 필요

- ▷ 영주댐 지사장이 직원 갑질 사건 이후 2급지에서 1급지로 영전한바, 이에 대해 조치를 할 것

(8)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재검토 필요

- ▷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의 일환으로 창녕 강변여과수 사업을 추진하

고 있으나 지하수 수위 하강 문제, 대규모 도수관로 설치, 주민 반대 및 갈등으로 인하여 실현 가능성이 낮으므로, 보 수문 개방 등 낙동강 본류의 수질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9) 성과와 괴리된 경영평가결과에 대한 해명 필요

- ▷ 부채가 증가하고, 2020년 댐 무단 방류로 인해 홍수가 발생하는 등 공사 운영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상황에 대하여 해명할 것

(10) 스마트 관로 시설정보 인식체계 사업 자원 배분 현실화 필요

- ▷ 스마트 관로 인식체계 사업은 적수 예방·조기대응과 관련이 낮은 관로 위치 센서 설치사업에 대부분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바, 관로 위치센서 설치 사업 예산을 밸브 이력 관리 및 조작 담당자 교육, 맨홀 분야 사업 등으로 재조정할 것

(11) 기상청 협업 위한 수자원공사 기상 관련 역량 확보 필요

- ▷ 2020년 홍수 이후 기상청이 협업 차원에서 댐 유역 단위 맞춤형 강수 예측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수자원공사 소속 기상인력이 부족하여 기상청에서 생성한 자료를 가공해 활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기상인력 확보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

(12) 부정당업자와의 계약 체결 문제 재발 방지 필요

- ▷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감사 결과 수공이 입찰 참가자격 제한

된 부정당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입찰 담합한 업체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6개월 지연하여 해당 업체와 부당하게 계약 체결한 건이 26건 및 액수는 57억에 달하므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3) 댐 수몰지 내 미보상 사유지에 대한 보상 자료 확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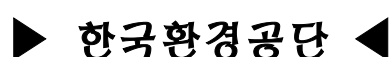
- ▶ 댐 건설로 수몰된 토지 중 미보상 지역에 대한 현황조사 및 보상 자료 DB화를 실시하고 있으나 진행이 저조한바, 보상자료 확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

(14) 진행예정인 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필요

- ▶ 부안군이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 상수도 현대화 사업에서 수도관이 파손되었으나 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시공사 부담으로 재시공한바, 향후 한국수자원공사가 진행할 예정인 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도 하자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

(15) 도시 홍수 대응 시스템 선진화 필요

- ▶ 도시는 높은 불투수면적률에 비해 배수시설 처리용량이 부족하여, 관리가 소홀한 지방하천과 소하천에서 홍수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바, 환경부 주도로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디지털 기반 도시홍수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마련할 것



(1) 층간소음문제 해결 대책 마련 필요

- ▷ 지난 5년 간 층간소음 접수사례 대비 소음기준 초과사례의 비율이 매우 저조한 것은 층간소음 기준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므로, 층간소음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2) 악취 민원 해소 위한 예산 및 인력 확충 필요

- ▷ 악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실태 조사 요구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한 예산 및 인력을 확충할 것

(3)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임명 부적정

- ▷ 정치적 편향성이 있고 서울시 민간위원 활동 당시 겸직 의혹이 있는 시민운동가가 환경공단 상임감사로 임명되었는데, 이는 부적정한 것으로 파악되는바 인사조치를 검토할 것

(4) 부안군 상수도 현대화 사업 부실 대책 마련 필요

- ▷ 부안군이 환경공단에 위탁한 상수도 현대화 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되었고, 하자에 대한 귀책사유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재시공이 되었으므로, 롯데건설과 (주)고비가 부안군에 제출한 시험성적서 내용이 걱정했는지 여부, 자재 샘플에 대한 품질 시험 시행 결과, 하자 원인불명 결론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보고하고, 수자원공사 및 환경공단이 협력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5) SRF 품질검사 및 적재 관리 철저히 할 필요

- ▷ 자원재활용법상 SRF와 같은 고품질연료제품 관련 실태 조사는 폐자원에너지 센터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품질기준 적합여부 검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

(6)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대책 마련 필요

- ▷ 영농 폐비닐 수거율, 폐농약용기류 수거율이 낮아 잔여 폐기물이 방치되고 있으므로 수거 대책을 마련할 것

(7) 악취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 ▷ 악취 관리 지역 지정 실적이 저조하므로, 악취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악취 발생 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악취방지법 개정을 통해 환경공단이 악취 관리 지역 지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것

(8)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확대에 의한 문제 대응 필요

- ▷ 환경부와 공단 공동으로 실시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에 대한 용역에서 오물분쇄기 사용 증가 시 하수처리시설에서 오물을 처리하기 어렵고, 불법 유통 통제 문제도 있다는 결과가 나왔으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9) 중소기업 제한경쟁 미실시 문제

- ▷ 국무조정실 감사 결과, 2억 10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가 많으며

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10) 영농폐기물 수거·운반 과정 부정행위 방지 필요

- ▷ 영농폐기물 수거·운반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하여 수거·운반업자가 수거보상금을 부정으로 수령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보상금 횡령 방지를 위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11) 굴뚝 TMS 설치 확대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 대기관리권역이 확대됨에 따라 신규 굴뚝 TMS 설치 신청 및 신뢰성 시험 업무가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설치 완료가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재의 비상근무체계외에도 환경부와 협의하여 기한 내에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국립공원공단 ◀

(1) 국립공원 내 불법 벌목 문제 대책 마련 필요

- ▷ 국립공원 내 불법 벌목 사례가 증가하였으나 불법 벌목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이행률이 낮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2) 지리산 국립공원 내 침엽수림 훼손지역의 탐방로 정밀조사 필요

- ▷ 지리산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에서 구상나무가 집단 고사하였고, 이는 산사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지리산 국립공원 내 침엽수림 훼손지역의 탐방로에 대한 정밀조사를 할 것

(3) 헬기 노후화 문제 해결 필요

- ▷ 1997년에 구입한 헬기 1대로 전국 21개 공원을 관리중이지만, 노후화로 인해 긴급 고장 사례들이 발생하는 등 향후 대형 재난이 우려되므로, 헬기에 대한 정비·관리를 강화할 것

(4) 설악산 흘림골 탐방로 안전 정밀조사 실시 및 낙석위험 탐방로 폐쇄 필요

- ▷ 2015년 설악산 국립공원 흘림골에서 낙석사고로 인한 사망사건이 발생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충분한 조사·분석 및 대책 수립 없이 사업이 재추진되고 있는바, 탐방로 공사 위험성 정밀 조사를 하고 낙석위험이 있는 탐방로를 폐쇄할 것

(5) 국립공원 내 생태통로 설치 노력 필요

- ▷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로드킬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태통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으나, 아직 국립공원 22곳 중 12곳에는 생태통로가 설치되지 않았으므로, 국립공원 내 생태통로 설치를 위해 노력할 것

(6) 자연보존지구 내 부적절 시설 문제 해결 필요

- ▷ 공원자연보존지구 내 주차장, 노후 공중화장실, 사유지 등 부적절

한 시설이 다수 존재하므로, 성삼재-정령치 주차장 녹색 전환 로드맵을 수립하고 관련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7) 직원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운영 비용의 전액 공단 부담 검토 필요

- ▶ 직원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의 본인부담률이 20%인바, 유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다른 기관들과 같이 해당 프로그램 비용을 전액 공단이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8) 사무소 근무환경 개선 필요

- ▶ 국립공원 내 현장근무자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소 중 일부가 임시 가설물로 설치되었고 환기 설비도 미흡한 등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코로나19 집단 확진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사무소 근무환경을 개선할 것

(9) 국립공원공단 직원 기강 확립 필요

- ▶ 2020년 국립공원공단 내 음주운전 및 성희롱 사건이 다수 발생한 바, 직원 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1) 폐기물 혼합반입 검사의 실효성 확보 대책 마련 필요

- ▷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혼합반입 검사가 별도의 장비 또는 검사 기술 없이 육안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향후 혼합반입 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2) 제3-1매립장 포화에 따른 매립지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 수도권매립지 제3-1매립장 포화 시기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사용 연장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 준비가 부족할 경우 수도권 내 매립지의 공백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매립지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3) 하수슬러지 처리 대책 마련 필요

- ▷ 현재 수도권 내에서 발생한 하수슬러지를 공사에 위탁하여 발전소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현재 발전소에서 하수슬러지 공급 중단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하수슬러지 처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1) 내부 비리 및 부정에 대한 자체 혁신 방안 마련

- ▷ 정부지원 사업 선정을 대가로 직원이 뇌물을 수수한 사례, 외부강의 및 회의 미신고 및 누락 사례, 경영평가 성과급 과다 지급 사례 등 내부 비리 및 부정 사례가 있는바, 이를 시정할 것

(2) 제강슬래그의 환경표지제품 인증 기준 강화 필요

- ▷ 도로 기층재 등 매립 용도의 제강슬래그는 강알칼리성의 침출수 유출로 토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인증영역을 현장 관리할 필요가 없는 영역으로 줄이거나 현장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

(3) 환경정보공개제도 운영 개선 필요

- ▷ 환경정보공개제도 담당 인원이 7명에 불과하고, 검증 절차가 많아 검증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바,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할 것

(4) R&D 심사 과정 및 사업 선정 적절성 여부 검토 필요

- ▷ 화학사고 대응 R&D 사업심사와 관련된 뇌물 수수 사건이 발생하였던바, 재발 방지를 위해 인사 대가, 선정 과정 및 사업 결과물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토할 것

(5) 미래환경산업융자 대면 간담회 시행 문제

- ▷ 코로나 19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간담회 대신 대면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나, 참가율이 저조했고 대관료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등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는바 이를 시정할 것

(6) 환경표지인증제도 운영 정상화 필요

- ▷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의 적정성 점검 결과 445개 제품이 부적정 판정을 받았고, 환경표지 인증기업이 1개월 초과하여 환경규

제 위반 사실을 통보했는데도 연장 승인된 사안이 68건에 달하는 등 환경표지 인증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운영 관리를 강화할 것

▶ 국립생태원 ◀

(1) 대장동 난개발로 인한 멸종위기종 서식지 훼손 문제

- ▶ 2015년 대장동 생태자연도는 천연기념물인 붉은배새매로 인해 1등급이었으나, 개발 이후 붉은배새매가 발견되지 않아 2등급으로 판정된바, 대장동 난개발로 인한 멸종위기종 서식지 훼손 문제에 대하여 해명할 것

(2) 금강하구둑 외부조사원 사망사고 관련 대책 마련 필요

- ▶ 금강하구둑 어선전복으로 외부조사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바, 이에 대한 후속 조치 및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외부조사 시 안전인력을 조사원으로 포함시키며, 안전관리 규정에 외부조사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외부조사원의 근로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관련 방안을 검토할 것

(3) 양산 사송지구 공사 문제 해결 필요

- ▶ 고리 도룡뇽 서식지 보전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생태원의 이행조치 검토의견이 결정적 근거가 되어 양산 사송지구 공사가 재개되어 검토의견의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된바, 이와

관련하여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하고 후속 조치를 취할 것

(4) 우포늪 생물 집단 폐사 문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 ▷ 우포늪에서 녹조의 영향으로 생물 집단 폐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모니터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할 것

(5) 생태원 소속 수의사의 인력 증원 및 처우개선 필요

- ▷ 생태원 소속 수의사들의 근무시간이 과도하고 업무량이 많으며 처우도 좋지 않아, 근무기간이 짧고 전문성을 축적하는 데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인력 증원 및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6) 국가 단위 장기적 생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필요

- ▷ 우리나라는 타 선진국과 달리 국가 전반의 생태계 변화를 장기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하고 현재는 일부지역에 대해서만 생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생태계관측소 설치, 관측총괄센터 설치 등 국가 단위의 장기적 생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상하수도협회 ◀

(1)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 운영 철저한 관리 필

요

- ▷ 자격증을 먼저 발급하고 교육 이수 후 자격을 평가하는 현재의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는 교육비가 과다한 반면, 의무 배치 위반 시 적절한 법적 조치가 부재하여 민간 수도사업자가 배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자격제도 운영 관리를 강화할 것

(2) 일부 회원사 담합에 대한 강력한 대응 필요

- ▷ 공정위에 적발된 수도관 구매 입찰 과정에서의 1,300억 규모 수도관 단가 담합에 참여한 10개 업체 중 3개 업체가 상하수도협회 소속이므로, 담합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

2) 고용노동부 소관

▶ 고용노동부 본부 ◀

【조직·인사·재무 등 일반사항】

(1) 고용노동부 백서 및 공공데이터의 적절한 관리 필요

- ▷ 고용노동부 백서의 발간시기가 늦고, 공공데이터도 제대로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으므로 백서 및 공공데이터의 업데이트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2)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제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

-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폴리텍에서 용역을 수행한 자가 경영실적 평가위원회에 포함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평가위원 교체 시기 및 제척사유를 강화하는 한편 평가와 성과급을 연동하는 등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고용 부문】

(1)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화 방안 마련 필요

- ▷ 지출 증가·운용 수익률 악화 등으로 고용보험기금이 고갈 위기에 처해 있으므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및 지출 축소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할 것
- ▷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반복수급 또한 많으므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모성보호급여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등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고용보험기금은 지출 효율화가 필요하고, 수입측면에서도 1995년 이후 누적된 보험료 체납액이 5,365억원에 이른다. 고용노동부는 재정수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체납액 징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보험료를 인상에 대해서는 재검토 할 것

(2)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실효성 제고 필요

- ▷ 청년고용의무제 미이행 공공기관은 2021년 기준 48개로 2019년 대비 15개 증가하였고, 2년 연속 미이행한 기관은 9개소에 이르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미이행 기관에 대한 명단공개 및 경영평가 반영 등의 제재수단과 더불어 청년고용의무제의 실효성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3) 전일제 환산 고용률 및 장시간 일자리 감소 원인에 대한 분석 필요

- ▷ 고용률 상승·실업률 감소와 달리 전일제 환산(FTE, full-time equivalent) 고용률 및 장시간 일자리의 감소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FTE 결과를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4)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 필요

-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은 6개월 이상 근로한 청년 비율이 저조하고, IT 활용가능 직무에 채용된 청년이 비 IT업무를 수행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는 한편 부정수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고용안정사업의 부정수급 대책 마련 및 환수율 제고 필요

-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고용안정사업의 부정수급액은 급증한 반면 5년 동안 누적된 미환수금은 500억원이 넘는 등 환수율이 낮은 측면이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환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는 많지 않으므로, 부정수급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

(6) 코로나19 대응 사업들에 대한 점검 및 성과평가 필요

- ▷ 고용유지지원금,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등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고용회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전반적인 성과평가가 필요하므로, 고용노동부는 지원대상 근로자의 고용유지 여부, 노동법 위반사항 등 부정수급에 대한 사후점검과 성과평가를 실시할 것

(7) 공정한 채용절차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들이 있고, 현행법의 개인정보 요구금지가 서류에 한정되고 면접에는 적용되지 않는 등 제도상의 한계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구직자들이 공정한 채용절차로 취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8) 지역 주도형 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인센티브 구조 검토 필요

- ▷ 고용노동부는 지역 주도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K-디지털 트레이닝 인센티브 구조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할 것

(9) 모성보호제도의 정확한 실태파악 필요

- ▷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나 동조사로 출산휴가 등의 사용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모성보호제도들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

(10) 직장 내 성희롱 처벌 사각지대 개선 필요

- ▶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으나, 법인의 대표자는 현행법상 사업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법 개정을 통해 법인대표도 직장 내 성희롱 규정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할 것

(11)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 명단공표제도 개선 필요

- ▶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 명단공표제도는 장애인을 특정 기간에만 고용한 뒤 해고하는 방식으로 인하여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므로, 명단 공표 기준을 12월 말 장애인 고용률에서 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로 변경하고, 의무고용률을 100%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것

(12)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 ▶ 2020년 전체 공공기관의 66%, 국가기관의 38.2%만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제도에 따른 우선구매 비율을 준수하고 있는 등 동 제도의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공공기관 공시항목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을 추가하는 등 책임 강화 방안을 강구할 것

(13) 일자리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고용통계 개선 필요

- ▷ 현재 주 40시간 근로한 사람과 주 1시간 근로한 사람이 모두 취업자로 고려되는 등 고용 관련 통계에 일자리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고용 상황 관련 통계 산출 방식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4) 고용노동 교육 사업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담당 필요

- ▷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에 따르면 고용노동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직무 교육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담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업능력 개발을 담당하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취지에 맞게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고용노동 교육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

(15) 기후위기 대응 등에 따른 일자리 감소 문제 대응 필요

- ▷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내연차 부품 생산·석탄화력발전 등 일부 산업 부문에서 큰 폭의 고용 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므로,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와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관련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

(16)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을 위한 정부 지원 필요

- ▷ 탈탄소 정책에 따라 석탄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므로, 고용노동부는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을 위한 법률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석탄발전소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17) 한국판 뉴딜 추진에 따라 축소되는 일자리의 명확한 추계 필요

- ▷ 한국판 뉴딜 계획을 발표하면서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창출되는 일자리 통계는 분석·발표하는 반면 축소되는 일자리 규모에 관한 추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산업구조 전환 시 축소되는 일자리에 관한 분석을 철저히 할 것

(18) 농촌 인력난 해소 방안 마련 필요

- ▷ 농촌의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법무부 등과 농촌 인력문제 공동대응 TF의 구성을 논의하고, 프랑스 등 외국의 사례를 적극 검토하는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19) 고용안정자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예규 개정 필요

- ▷ 고용안정자금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에 부정수급 예방에 관한 규정이 미미한 상황이므로 예방 관련 조항을 보강하여 개정할 것

(20) 퇴직연금 제도 개선 필요

- ▷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21) 공공취업지원서비스 평가 체계의 개선방안 마련 필요

- ▷ 고용서비스기관의 알선취업이 단순돌봄 직종에 편중돼 있어 개선

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구인수요에 적합한 양질의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취업실적 중심으로 평가되는 공공취업지원서비스 평가 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22) 고용형태 공시제도 개선 필요

- ▷ 고용형태 공시제도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을 규정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재무제표 등은 공인노무사 등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고용노동부는 고용형태 공시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 방안을 검토할 것

(23) 유급휴일에 대한 이원화된 행정해석 보완 필요

- ▷ 근로일과 휴무일·비번일에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고용노동부는 전자는 유급, 후자는 무급으로 이원화된 행정해석을 하여 일급·시급제 형태 사업장에서 휴일수당 지급유무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임금기준 관련 행정해석을 보완하고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울 것

(2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결과 환류 기준 명확화 등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를 통해 일자리사업이 개선 필요 또는 감액 평가를 받더라도 예산 삭감·한시 사업으로의 전환과 같은 피드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25) 사업 재원을 확보하기 전에 사업을 집행하지 않도록 할 것

- ▷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은 기부 약정을 토대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실제 기부금이 부족하였음에도 사업을 집행하였으므로, 고용노동부는 사업 재원을 확보하기 전에 사업을 집행하지 않도록 할 것

(26) 고용보험 사업 개편 검토 필요

- ▷ 고용보험을 실업보험으로 전환하고, 그 외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국가예산 지원사업으로 분리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검토할 것

【노동 부문】

(1)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새로운 노사관계 모델에 대한 연구 필요

- ▷ 중앙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을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와 같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 등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는 사회 변화에 맞춰 새로운 집단적 노사관계 모델을 설정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할 것

(2) 취업규칙 신고제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

-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이 취업규칙을 미신고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고의 기한이 없고, 과태료 부과 이후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으므로 적절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3) 비정형 근로자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필요

- ▷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경륜선수들은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훈련수당 보장과 산재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것과 같이, 비정형 고용형태로 인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4) 스포츠협회를 대상으로 주 52시간제 도입 여부 및 편법 행위 발생 여부 조사 필요

- ▷ 2021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었음에도 주말 또는 야간에 경기가 개최되는 스포츠 산업의 특성상 KLPGA(한국프로골프협회)의 사례와 같이 이를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전국 스포츠협회를 대상으로 주 52시간제 도입 여부 및 편법 행위 발생 여부를 조사할 것

(5) 방송연기자 근로 여건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필요

- ▷ 방송연기자들이 2차 저작물에 대한 과도한 권리양도 조항으로 최소한의 수익 배분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불안정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으므로, 방송연기자의 근로 여건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

(6) 스타벅스코리아 취업규칙에 대한 조사 필요

- ▷ 스타벅스코리아의 취업규칙 중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항이 있으므로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7) 외국인 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 ▷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으므로 외국어 서류, 통역서비스 등이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원스톱으로 노동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8) 행정기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제도개선 필요

- ▷ 행정기관의 민간위탁 노동자 임금에 대한 중간착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 라인이 마련되었음에도 현장에서 미준수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9)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필요

-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그 사항을 보고할 것

(10) 다양한 형태의 노동에 대한 보호 제도 마련 필요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 모두를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

(11)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관련 이행상황 점검 필요

-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비정규직 중 일부가 부당해고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12) 콜센터 노동자 건강권 보호 방안 마련 필요

- ▷ 콜센터 노동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상당수가 직무 스트레스 관리 지침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환기 등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각종 지침 위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는 등 콜센터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3) 공공부문 용역·민간위탁 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 필요

- ▷ 공공부문 용역·민간위탁 계약서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및 노무비 착취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가이드라인 미이행 공공기관에 대한 명단 공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노무비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가이드라인 마련 시 노동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설계할 것

(14)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 외국인 근로자 숙소가 열악한 임시 주거시설인 경우가 있고, 정부가 정한 업무지침보다 많은 숙식비를 공제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외국인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기숙사 제공 여부 및 시설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고 관련 지침을 세밀하게 수립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5) 최저임금을 근로장려세제로 보완하는 방안 검토 필요

- ▷ 코로나19로 최저임금 인상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최저임금 인상

보다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로 보완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논의할 것

(16) 불안정한 노동 환경에 있는 방문점검노동자 보호방안 마련 필요

- ▷ 방문점검노동자들은 기본급 없는 임금체계로 생계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으로, 근골격계질환 등 산재예방을 위한 대안 마련도 필요함. 고용노동부는 방문점검노동자 보호 매뉴얼을 제작하고, 사측의 교섭해태 시 회사가 적극적으로 교섭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17) 감정노동자 보호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14개 업종 이외의 다른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하여도 감정노동자 보호법의 적용이 필요하고, 백화점 입점업체 노동자 등 감정노동자 보호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노사협력 및 공공노사 부문】

(1) 노조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필요

- ▷ SPC 그룹 가맹점에서의 운송거부 파업, 택배노조의 불법파업 등 노조의 불법적인 활동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노조의 불법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방안을 검토할 것
- ▷ 노조 간 집단 괴롭힘, 거대 노조가 소수 노조의 설립 또는 활동을 방해하는 등 노조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노조관계법상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것

(2) 노조 활동에 대한 SPC그룹의 부당 개입에 대하여 조치 검토 필요

- ▷ 노조 탈퇴 유도·특정 노조로의 가입 유도 등 SPC그룹이 노조 활동에 개입하고 방해한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기업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 등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할 것

(3) 노조의 불법 행동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처 필요

- ▷ 현대제철 비정규직노조의 당진제철소 불법 점거와 같은 사업장 불법 점거, 노조의 불법파업 등 위법한 행동에 대하여 고용노동부가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할 것

(4) MZ세대의 합리적 요구에 맞는 노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필요

- ▷ MZ세대 다수가 노조를 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불공정 문제, 노조에서 근로자 권익 보호 이슈 등한 시 등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노조활동이 그들의 요구에 맞게 공정성에 대한 관심과 근로자 권익 보호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5) 하림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의혹 조사 필요

- ▷ 하림 사측이 신노조의 과반수 노조 지위를 방해하기 위해 개입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의혹이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조사하고, 실제적 활동 내역이 없는 노조의 설립 무효화에 대하여 검토할 것

(6) 택배노조와의 교섭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등 문제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 택배노조의 대리점 측에 대한 과도한 요구 등 부적절한 행동으로 택배대리점주가 사망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택배 대리점주가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엄정히 대응하고, 본청-대리점주-택배노조 간의 교섭 틀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7) 택배 노동 관련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한 노력 필요

- ▷ 택배 노동 관련 사회적 합의에 대해 원청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합의 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8) 삼성화재 평의원협의회 노조 설립 절차 점검 필요

- ▷ 노동조합법상 총회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삼성화재 평협 노조가 임시총회를 개최할 당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점검하고 보고할 것

(9)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관련 조치 검토 필요

- ▷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노조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고발 등 부당노동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감독 계획을 보고하고, 책임자에 대한 조치 등을 검토할 것

(10) 배송기사 단체행동권 침해 계약에 대한 조사계획 수립 필요

- ▷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등에서 배송기사와 물류사간의 계약서에 단체행동을 하는 경우 계약의 종료, 운송비 지급 보류 등 단체행동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조사계획을 수립할 것

【근로기준 부문】

(1) 쿠팡의 쪼개기 계약, 과로사 및 주 52시간제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조사 및 근로감독 필요

- ▷ 쿠팡에서 3개월·9개월·12개월 단위의 쪼개기 계약 관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물류센터에 냉난방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야간 노동까지 이루어져 노동자가 과로로 추정되는 사망을 하는 등 근로조건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인 노동실태 조사를 실시할 것
- ▷ 쿠팡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시간당 생산량을 파악하는 UPH(Unit Per Hour) 시스템을 노동착취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주 52시간제를 미준수하며, 그로 인해 지난 3년간 산재 신청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 바,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 점검 및 근로감독을 실시할 것

(2) 샤넬코리아의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 필요

- ▷ 샤넬코리아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피해자보호 조치 미흡, 부실한 자체조사 문제가 있고, 코로나19를 명분으로 법정공휴일 미보장 등 부당한 근로조건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샤넬코리아의 전반적인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할 것

(3) 삼성물산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필요

- ▷ 삼성물산이 안전관리 우수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 현장에서 불법시공을 목인하는 등 안전관리 감독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삼성물산에 대하여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

(4) 신안 염전 인권침해 사건 관련 특별근로감독 필요

- ▷ 신안 염전에 소속되어 약 7년 동안 일하고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가 임금채불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근로감독관이 제대로 된 수사 없이 합의 종결한 사건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

(5) 남양유업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 특별근로감독 필요

- ▷ 남양유업은 특정 성별만을 모집하고, 임신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는 한편, 공손한 언행 등을 인사평가 항목으로 두는 등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항과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부당처우 문제가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

(6) 패스트푸드점 근로감독 확대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 한국맥도날드는 근무시간 임의 변경 및 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과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패스트푸드점에 대한 근로감독을 확대하고 진행 경과에 대해 보고하는 한편 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7) 카카오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필요

- ▷ 카카오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한 정기감독 및 수시감독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철저히 조사할 것

(8) 항공보안파트너스의 특정 노조 지원 등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필요

- ▷ 한국공항공사의 자회사인 항공보안파트너스에서 특정 노조에 이면합의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의심되므로 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

(9) IT 업종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 및 특별근로감독 필요

- ▷ 스마일게이트스토브 등 최근 IT 업종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문제가 제기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특별근로감독 실시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처벌방안을 마련할 것

(10)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필요

- ▷ 네이버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2.7%가 지난 6개월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수준이므로, 네이버는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안을 마련하여 제출하고, 고용노동부는 네이버 전 계열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검토

하고, 감독 결과에 따른 기소 및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 네이버는 자회사인 해피빈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회사의 문화와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고용노동부는 네이버 외에 해피빈도 특별근로감독 대상에 포함되도록 할 것

(11)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에 대한 자체조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 네이버에서 외부 기관을 통해 실시한 자체조사가 독립성이 훼손되고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있으므로, 향후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체조사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기준 신설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 책임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징계와 관련하여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할 것

(12) 근로감독 권한의 시·도지사 공유 방안 검토 필요

- ▷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는 경기도가 추진한 지방정부의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 도입 및 효과성 연구 용역 등을 검토하여,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 근로감독 권한을 시·도지사와 공유하는 것은 ILO 협약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에

따른 미흡한 현장관리의 대안으로 시·도지사과 근로감독 권한을 공유하는 관리감독체계에 대하여 검토할 것

(13) 불법파견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

- ▷ 현대모비스 등 일부 기업에서 불법파견 의혹이 있으므로 의혹이 있는 사업장을 감독하고, 불법파견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14) 체당금 회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 체당금 지급 액수가 점차 증가하는 반면 회수율이 감소하고 있어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체당금 회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15)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체당금 회수를 위한 근로복지공단 인원 충원 필요

- ▷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체당금 회수율이 저조하고 적립금 규모도 줄어들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체당금 회수를 위한 근로복지공단 인원 충원에 힘쓸 것
- ▷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체불임금 관련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이에 필요한 추가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16) 근로시간의 유연성 도모 필요

- ▷ 주52시간 근무제가 기업의 경쟁력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근로시간의 유연성 도모를 위한 주52시간 근무제의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17) 5인 미만 사업장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필요

- ▷ 2020년 임금체불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는 신고형 근로감독 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5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는 단 1건의 점검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할 것

(18)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으로 하는 방안 검토 필요

- ▷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되, 일부 사항에 대하여는 특례를 두어 적용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19)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조사·감독 필요

- ▷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을 분리하여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의 실태에 대해 조사하고 철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보고할 것

(20) 특별근로감독 결과 공표 기준 마련 필요

- ▷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이후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나, 특별한 기준이 없어 사회적 관심이 높고 업계 내 영향력이 큰 부분에 대해서만 공표하고 있으므로, 공표의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

(21) 근로감독제도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 네이버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망사건과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은 근로감독면제 등 근로감독 제도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면제 요건을 축소하고 연속 면제 금지 규정 등을 만드는 등 근로감독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22) 청소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대책 마련 필요

- ▷ 2020년 6월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및 과로사 의혹이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청소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23)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지원 확대 검토 필요

- ▷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체불, 성희롱 문제 해결과 청소년 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하여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 대한 지원 확대를 검토할 것

(24) 중소병원 교대근무 간호사 관련 근로감독 필요

- ▷ 중소병원 교대근무 간호사들의 경우 의사 업무를 대체하도록 강요 받거나 야근수당 미지급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실태 점검 및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

(25) 패션 어시스턴트 노동자 관련 근로감독 필요

- ▷ 패션계에 종사하고 있는 어시스턴트 노동자들의 경우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해당 업계에 대해 철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26) 근로감독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 파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감독 현황 파악 필요

- ▷ 해외에 파견된 근로자들은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감독 가능 여부 및 관할 등에 관해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 노동법 적용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사항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법적 검토를 실시할 것

(27) 스타벅스코리아에 대하여 근로감독 실시 필요

- ▷ 스타벅스코리아의 산재발생 건수는 2020년 이전 10건 이하에서 47건으로 증가하였고, 우울장애, 불안장애 등을 겪는 노동자 역시 대폭 증가하였으므로 스타벅스코리아에 대하여 산업안전 분야를 포함한 전반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보고할 것

(28) 근로감독 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 2021년 근로감독관 신뢰도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신뢰한다는 응답이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본부와 지방청 간의 연계 및 현장 집행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고사건 처리 외에 사전 예방활동 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산재예방 및 보상 부문】

(1)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 확립을 위한 제도 정비 필요

-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의무적으로 해야 함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는 기업의 수가 많은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스템 정비 방안을 강구할 것

(2) 현행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재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 ▷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진행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장에서 중대 재해가 재발하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과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3) 특별근로감독 시정조치 확인 절차 점검 필요

- ▷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시정조치 확인을 현장 조사가 아니라 사업장이 제출한 사진 자료만으로 점검하고 있고, 현재의 산재 통계는 실제 산재를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점검할 것

(4) 학교급식실 노동환경 개선 필요

- ▷ 유해인자 물질 노출 위험과 관련하여 ① 급식실 종사자 임시건강 진단 실시, ② 급식실 등에서의 유해인자 노출 가능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산재 위험 보호 방안 마련, ③ 급식실 종사자 1인당 최대 식사 수요 인원 제한 등을 포함한 적정 배치기준 마련, ④ 조

리업무노동자·고용노동부·교육부 간의 3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학교급식실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5) 학교 영양교사의 산업안전 관련 업무범위 개선 필요

- ▷ 학교급식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비전문가인 영양교사가 수행하도록 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취지와 다르게 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학교에서 위험성 평가 등 산업안전 관련 업무를 영양교사에게 맡기는 현행 제도를 개선할 것

(6) 학교급식 및 요양병원 돌봄 담당자 등의 집회 참여에 따른 코로나 확산 방지 관리 필요

- ▷ 고용노동부는 학교급식 및 요양병원 돌봄 담당자 등이 집회에 참가하여 코로나 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것

(7) 공공기관 산업재해 증가 원인 분석 필요

- ▷ 공공기관 산재사건이 2017년 대비 2020년에 160% 증가했고 사망자 수도 2배 이상 증가한 상황을 고려하여 원인을 분석할 것

(8) 건설 추락사고 방지대책 의무화 여부 확인 필요

- ▷ 2019년에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건설 추락사고 방지대책이 2021년에 민간부문에서 의무화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것

(9) 소형 타워크레인의 불법 운용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

- ▷ 현장에서 소형 타워크레인의 안전장치를 조작하여 허용 중량 이상의 자재를 옮기는 등의 불법 운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10) 조선업 중대재해 예방대책 마련 검토 필요

- ▷ 현대중공업에서 중대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슬림화하여 안전관리를 체계화하고 하청업체 공정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원청이 수행토록 하는 등 조선업 중대재해 예방대책 마련하여 보고할 것

(11) 현대HCN 외주업체 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 필요

- ▷ 현대HCN은 전신주, 건물 외벽 등에서 작업하는 외주업체 노동자들에게 안전모만을 지급하고,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관리의 책임을 외부업체에 지우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외주업체 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해 해당 업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할 것

(12) 태영건설 근로감독 결과 점검 필요

- ▷ 고용노동부는 2021년에만 공사장 등에서 3명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태영건설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특별감독 결과에 대해 점검할 것

(13) 발전소 산업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 2019년 8월 김용균 특조위가 22개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현장은 여전히 위험요인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고용노동부는 영흥화력발전소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하는 등 발전소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14) 배달라이더에 대한 보호 강화 필요

- ▶ 배달업체 사업자의 배달라이더 안전조치 이행 여부 점검을 신속하게 실시하고, 배달라이더의 산재보험 가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점검 결과와 함께 보고할 것

(15) 배달종사자 재해 조사 및 안전관리의무 점검 방안 마련 필요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배달종사자 산업재해가 단순교통사고로 처리되지 않도록 경찰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재해 조사 방안을 마련하고, 배달대행·중개업체에 대한 안전관리의무 점검 방안을 마련할 것

(16) 현장실습생 산재사고 재발 방지대책 수립 필요

- ▶ 여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고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연계하여 현장실습생들에 대한 산재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현장실습 운영현황 등 전수조사 계획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17) 중대산업재해의 수사권을 근로감독관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필요

- ▷ 산업현장에서 중대산업재해 수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대산업재해 수사권을 경찰이 아닌 근로감독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8)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제도의 실효성 강화 필요

- ▷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 교육 미실시에 대한 처벌 강화, 위험 직종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보고 의무 신설 등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9) 건강관리카드 제도 개선 검토 필요

- ▷ 건강관리카드를 근로자 당사자 외에 사업주도 발급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유해물질의 종류를 확대하며, 발암물질을 중량비중으로만 제한한 문제를 개선하고, 유해물질을 직접 취급하지 않더라도 함께 노출되는 사람들 모두에게 적용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20) 국민적 관심도가 낮은 사업장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

- ▷ 보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상대적으로 국민적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사업장의 산재사고에 대하여도 고용노동부가 엄격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할 것

(21) 산업안전 감독·수사분야와 기술분야 교육의 이원화 검토 필요

- ▷ 산업안전 감독·수사분야 교육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으로, 산업용 기계설비 체험 등 기술분야 교육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안전 보건교육원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

(2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필요

- ▷ 산업재해 재심사의 법정 처리기한 준수율이 낮으므로 산재 재심사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심사관 확보 등 대책을 마련할 것

(23) 업무상 질병 산재 판정 통계 인프라 구축 필요

- ▷ 업무상 질병 산재 판정에 대한 데이터 구축과 통계 분석이 이루어지면 판정위원회는 신속한 판정을 할 수 있고 산재 근로자들도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질병 판정 통계 인프라 구축방안을 마련할 것

(24) 뇌심혈관 질환의 지역별 산재 승인률 편차 개선방안 마련 필요

- ▷ 최근 5년간 뇌심혈관 질환의 업무상 질병 판정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별 산재 승인률 및 산재 처리기간에 차이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지역별 승인률 편차의 원인을 파악하고 표준화하여 일관된 판정이 되도록 할 것

(25) 태아의 산업재해를 보호하는 법안 마련 필요

- ▷ 부모의 작업환경이 태아에게 영향을 주어 장기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등 태아의 산업재해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므로, 정기국회 기간 중에 태아의 산업재해를 보호하는 법안의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26) 업무 연관성이 높은 경우 산재 승인절차 개선 필요

- ▷ 정신질환은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전담하다가 각 지역으로 분산한 후 장애 판정 승인율은 높아지고 판정 소요일은 감소하였음. 고용노동부는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업무 연관성이 높은 경우에는 질병판정위원회를 거치지 않더라도 지사에서 판단해서 산재 승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것

(27)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확대 필요

- ▷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 정책의 의무가입 대상 확대를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방안 등 산재보험 적용 확대 계획을 수립할 것

(28) 산재위로금 지급 금액 적정성 및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 조사 필요

- ▷ 화천대유 소속 직원의 산재위로금 지급 금액의 적정성 및 산재위로금의 성격, 화천대유의 산재 은폐 의혹,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에 대하여 조사할 것

(29) 산재위로금 등이 뇌물·증여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마련 필요

- ▷ 산재위로금 등이 뇌물·증여 또는 세금 탈루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

(30) 야간 일용근로자 건강진단제도 개선 필요

- ▷ 현재 일정한 조건의 야간근로를 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전 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나, 일용근로자는 계속근로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혼란이 있는 등 동 규정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중앙노동위원회 ◀

(1) 구제명령 이행률 제고와 이행강제금 제도 개선 필요

- ▶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구제명령을 이행한 경우가 60%정도이고, 이행강제금 수납률이 36.4%에 불과하므로 원직복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제명령의 이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 이행강제금 상한액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나 정률화, 정액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기업의 규모나 매출액 등 기준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 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신뢰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등

- ▶ 노동위원회의 사건 처리 일수는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노동자의 권리구제율은 '18년 64.5%에서 '20년 59.9%로 떨어지고 있으므로, 그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10건 중 1건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이 바뀌고, 행정소송이 제기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5건 중 1건은 법원에서 그 결과가 바뀌고 있는 상황인 바, 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3)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명령 이행 여부 파악 필요

- ▶ 중앙노동위원회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그 이행 여부에 대하여는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고 있으므로 지방고용노동관서와 노동위원회 간 협력관계를 통하여 관련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4) CJ대한통운의 사용자성 인정 결정에 따른 혼란 최소화 필요

- ▶ 중앙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을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게 해당한다고 판정한 것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단체교섭 상대방 결정 등에 관하여 노사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할 것

(5) 노동위원회 위원 제척 관련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 노동위원회 위원 제척 시 노동위원회법이 정한 취지를 넘어서서 임의로 판단하지 않도록 지침을 전달하는 등의 개선방안과 위원 교체 시 전문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6) 한국경륜선수노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의 충실한 심사 및 결과 보고 필요

- ▶ 한국경륜선수노조는 국민체육공단과 기본금 지급, 훈련 중 안전조치 이행 등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는데, 공단측이 단체교섭을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충실한 심사 후 그 결과를 보고할 것

(7) 노동위원회 심판에 대한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 심판정 출석이 곤란한 경우에 대비하여 원격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지역 또는 권역 순회심판소 운영 방안을 모색하며, 사건 접수 및 서면 제출 등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

(8) 노동위원회 윤리강령 위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필요

- ▶ 노동위원회 윤리강령에 위원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언행을 금지하고, 사건 관계인에게 정중하게 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일부 사건에서 윤리강령 위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윤리강령 위반에 대한 제재 기준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9) 방송작가의 근로자성 인정 관련 동일한 기준 유지 필요

- ▶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방송작가의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부당해고를 인용하였는 바,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하여도 같은 기준에 의해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법원에 계류 중인 행정소송에서도 근로자성 인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응할 것

▶ 최저임금위원회 ◀

(1) 최저임금 내·외국인 차등적용 관련 해외사례 조사 필요

- ▷ 최저임금 내·외국인 차등적용 관련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를 조사하여 보고할 것

(2) 초단시간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 일주일 동안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적용이 제외된다는 점 등을 악용하여 근로 쪼개기 계약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1) 삼성화재 평의원협의회 노동조합 설립신고 교부 과정 조사 필요

- ▷ 서울지방노동청은 삼성화재 평의원협의회에 대해 노조 설립신고증을 교부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평의원협의회가 설립 당시 거쳐야 할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노조 및 단체교섭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으므로 설립신고증 교부 과정에 잘못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직권 취소 가능 여부를 검토할 것

(2) SBS 단체협약 해지 통고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한 철저한 지도 필요

- ▷ 사장 임명동의제는 소유와 경영 분리를 통해 공정방송을 실현하기 위한 장치이나, SBS 사측은 사장 임명동의제 폐지를 주장하고 단체협상 해지 통고를 하였던 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 사항에 대해 철저히 지도할 것

(3)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 필요

- ▷ 세브란스병원 용역업체 소속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수사가 지연되어 노동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 사건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절차 진행 방안을 마련할 것

(4) 세브란스병원 발생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조사 필요

- ▷ 세브란스병원 내에서 노조 참여에 따른 부당한 퇴사 강요, 따돌림, 차별대우 등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

(5)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발생한 노조 탄압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특별근로감독 필요

- ▷ 다국적 제약회사들(줄릭과마솔루션즈서비스코리아, 한국먼디파마)에서 노사간 단체교섭 진행 중 노조 측 교섭 대표자들을 해고하거나 징계하여 노조의 교섭력과 단결력을 약화시키는 사건이 발

생하였으므로, 관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진행 상황에 대하여 보고할 것

(6) 청사 불법 점거에 대한 엄정 대처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필요

- ▷ 2019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민주노총 소속 금속노조에 점거되어 청사 파손, 손괴 등이 발생하고 직원 3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바, 불법 점거에 대하여 엄정 대처하고, 향후 유사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1) 취업규칙의 노동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심사 필요

- ▷ 화천대유 취업규칙은 정부에 제출하기 직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고, 법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필수적인 기재사항이 빠져있어 허술한 측면이 있음. 고용노동부는 노동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것

(2) 배송기사의 단체행동권 침해 계약에 대하여 검토 필요

- ▷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등에서 배송기사와 물류사간의 계약서에 단체행동을 하는 경우 계약 종료, 운송비 지급 보류 등의 내용을 명시하여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도·감독 등을 철저히 하여 해당 계약 조항에 대한 시정지시 여부를 검토할 것

(3) KPGA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에 대하여 근로감독 실시 필요

- ▷ KPGA(한국프로골프협회)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 조사 등 적절한 조치 여부 및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여부 등에 대하여 근로감독 실시 필요

(4)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당노동행위 관련 사건에 대한 엄밀한 조사계획 수립 필요

- ▷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특정 노조를 상대로 고소·고발 및 민사소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부당한 소송 제기는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 사건에 대한 엄밀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할 것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

(1)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개선책 마련 필요

- ▷ 2021년 1월 양산지청 외국인력담당자들과 근로감독관들은 밀양 지역 외국인 고용사업장 6개 농장 점검에서, 근로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로 제공 등의 문제에도 6개소 모두에 대하여 ‘위반사항 없음’으로 처리하고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 바, 사업장 관리감독 개선책과 외국인 노동자 노동 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및 공직기강 확립 필요

-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소속 진주시청에서는 사건 허위 종결, 서류 무단 반출 등을 이유로 담당 공무원의 해임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향후 동일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공직기강을 세울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것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

(1) 시정명령 이행 여부 확인 절차 및 방법 개선 필요

- ▷ 2021년 2월 포스코 특별근로감독에 따른 129건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100% 시정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자료가 작성되었으나, 시정명령 사항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거치지 않고 조치 완료 결정을 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시정명령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 및 방법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 대성에너지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및 CCTV 설치 등과 관련한 조사 및 조치 필요

- ▷ 대성에너지에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6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는 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여부를 확인할 것

- ▷ 대성에너지가 노조 설립 이전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CCTV를 설치한 것에 대하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3) 구미 KEC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 필요

- ▷ 구미 KEC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사건과 관련하여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이 접수되어 있으므로 관련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1) 현장실습생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조사 실시 필요

- ▷ 여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할 것

(2) 해남 화원농협과 문내농협에 대하여 근로감독 필요

- ▷ 해남 화원농협과 문내농협에서 노조 간부나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사발령을 통해 정당한 노조활동이 억압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진정·고소 등 노사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전반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적극 대응할 것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1) 현대제철의 불법파견, 노조활동 방해 문제에 대하여 특별 근로감독 필요

- ▷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 당진공장 및 사내 협력업체에 불법파견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현대제철은 현대ITC라는 자회사 설립을 통해 고용전환을 추진하고 이를 거부하는 하청 노동자에 대한 노조활동 방해, 불법 대체인력 투입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를 검토할 것

▶ 공공기관 공통사항 ◀

(1)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모니터링 및 결과에 따른 적정 조치 필요

- ▷ 공공기관 자회사 용역 설계 및 계약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정부권고안 준수 여부 공개·미준수 기관장 경고조치 등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근로복지공단 ◀

(1) 체당금 오지급에 대비한 인력 확보 및 회수절차 관련 제도 마련 필요

- ▶ 근로자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체불확인서에 따라 체당금이 잘못 지급되었을 경우에 대비하여 소송업무 담당 변호사를 충분히 확보하고 회수절차 관련 제도를 마련할 것

(2) 업무상 질병 산재 승인 관련 개선방안 마련 필요

- ▶ 업무상 질병 산재 승인율이 저조하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질병판정 처리기간 또한 법정처리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별진찰 제도 확대, 노후화된 의료장비 교체, 의료정보공유 시스템 확대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3) 소음성 난청 재해 판단지침 개선 필요

- ▶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지침 개정 이후 소음성 난청 업무상 재해의 불승인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고, 각 지사별로 불승인 비율의 차이가 나는 등 처분에 일관성이 없어 신뢰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자의적인 판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판단 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만드는 등 지침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4) 과로사 산재 심사 시 종합적으로 요인을 고려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 필요**

- ▷ 뇌심혈관질환은 과로사 인정 비율이 낮고 산재 처리기간 또한 오래 걸리므로, 공단 내에 과로사 판단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 질병에 과로사도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 과로사 불인정에 대한 소송 시 공단의 패소율이 높으므로, 과로사 산재 심사과정에서 업무부담 가중요인마다 기준을 세분화하고 근무환경을 고려하는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것

(5) 학교급식실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로 인한 산재 신청 시 조속한 인정 필요

- ▷ 학교급식실에서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인 조리흡으로 인한 산재 신청 시 인과관계 추정 등의 방법으로 조속히 산재가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채용비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 필요

- ▷ 인천병원 소아청소년과 면접전형에서 병원장 단독으로 면접평가를 진행하는 등 채용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직 1개월 등 낮은 징계를 내린 바, 고용노동부는 채용비리 및 부실감사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할 것

(7)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관련 산재 판정기준 마련 필요

- ▷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산재의 승인 절차 및 세부 판정 기준을 마련하고,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8) 산재 심사의 일관성 및 공정성 제고 필요

- ▷ 재심·행정소송을 통한 결과변경, 지사의 결정이 본사 또는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 변경되는 비율이 높으므로, 일관성 있는 산재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 진폐장해등급 판정과 관련하여 공단 병원의 진단결과와 진폐심사회의 심사결과가 서로 달라 이에 대한 진폐환자의 불만이 상당하므로, 진폐장해등급 판정 시 공정성을 제고할 것

(9) 시설 및 장비 노후화 대책 마련 필요

- ▷ 공단 직영병원의 시설 및 장비가 노후화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산재기금 지출 비중이 미비하므로, 의료발전준비금 적립, 재활전문관 건립 등의 다양한 대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
- ▷ 직업환경연구원은 그 업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연구장비의 노후화가 상당하고 이로 인해 역학조사의 소요일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연구장비 교체 등을 위한 예산반영 등 대책을 마련할 것

(10) 무기계약직, 공무원노동자 등에 대한 처우 개선 필요

- ▷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할 것
- ▷ 현재 사업운영비 예산을 절감하여 지급하고 있는 근로자정보조사원의 복리후생비가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공단 공무원노동자의 1인당 평균 보수액 수준이 전체 공기업·준정부기관 125개 기관 중 116위에 불과하는 등 그 수준이 낮으므로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1)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 시 불법 사무장병원 제외 방안 마련 필요

- ▷ 공단 지정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결정액이 123억원에 이르는 바,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 시 사전에 불법 사무장병원을 제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1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제도 보완 필요

-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시 업종별 예외대상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

(13)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노력 필요

- ▷ 근로자건강센터의 파견법 위반 논란, 부당해고 관련 구제명령 이

행 불복 등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에 대하여, 각 산하기관이 모범 고용주로서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시정 노력할 것

(14)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필요

- ▷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시행에 필요한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할 것

(15) 건설기계조종사의 보험료 이중부과 문제 개선 필요

- ▷ 건설현장 내 임대차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를 포함하여 건설기계조종사를 파견하는 경우, 건설기계조종사의 산재보험료 납부의무자와 고용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달라, 부과체계의 혼란으로 보험료가 이중부과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1)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개선 필요

- ▷ 벨트식 안전대는 추락사고 시 부상 및 사망 위험이 크므로 벨트식 안전대 사용을 금지하거나 안전그네식 안전대 사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를 개선할 것

(2)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의 보완 및 강화 필요

- ▷ 산재예방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현재 12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건설업과 완성배·블록제작 사업장의 협력업체 및 수리조선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에 대하여 중장기적인 보완 및 강화대책을 마련할 것
- ▷ 안전보건지킴이 또는 패트롤 현장점검 등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시설 미비, 개인보호장비 미착용, 안전수칙 미이행 등 산업현장에 만연한 안전불감증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것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 재해발생 위험 사업장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이행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패트롤 현장점검 사업에 대한 인력·예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산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점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 35명 중 33명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상의 안전계획 미준수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 바,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현장 중심형 계획서의 설계를 검토할 것

(4) 난임 유급휴직 사용 활성화 노력 필요

- ▷ 취업규칙 개정 등을 통해 난임 유급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난임치료휴가의 인지도 및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위험성평가 사업 내실화 필요

- ▷ 최근 5년간 위험성평가 컨설팅 실적이 줄어들고 있고 대상업종 또한 제조업·서비스업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위험성평가 우수 업종 인센티브 확대 등 사업주의 컨설팅 사업 참여 유도 방안을 마련할 것
-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은 사업장에 대한 사후심사 결과 기준 미충족으로 인정이 취소된 건수가 많으므로,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인력의 조속한 배치 필요

- ▷ 지난 국정감사 등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사업의 수행인력 미배치 및 인력운용의 부적정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검사인력이 제대로 배치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검사인력이 조속히 배치될 수 있도록 할 것

(7) 근로자건강센터 운영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 공단이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운영을 조선대 산학협력단에 재위탁한 것에 대하여 파견법 위반이라는 1심 판결이 있었고, 근로자건강센터의 부실운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건강센터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운영 개선책을 마련할 것

(8)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제도 개선 필요

- ▷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와 실제 공공기관의 산업재해를

간의 상관관계가 미흡하므로, 실효성 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개선할 것

(9) 여성 건설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방안 마련 필요

- ▷ 여성 건설근로자에 적합한 안전보호장비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작업장에서의 성희롱 예방을 위해 관련 교육을 정례화하는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

(10)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노력 필요

- ▷ 근로자건강센터의 파견법 위반 논란 등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각 산하기관이 모범 고용주로서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시정노력할 것

(11) 산재 관련 R&D 예산 확보방안 마련 필요

- ▷ 건설 가설재 사용연한, 이력관리, 품질인증 기준 연구 등을 위해 산재 관련 R&D 예산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

(12) 당초 기부금 마련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필요

- ▷ 삼성전자·반올림 등에서 백혈병 등 산재 질환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부한 금액을 집행하지 못하고, 부동산 매입 등 기부 취지에 맞지 않게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기부금 집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기부금이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 한국산업인력공단 ◀

(1) 중소기업 직업훈련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

- ▶ 중소기업 사업주 훈련프로그램 확대방안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중소기업 직업훈련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2)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 37개 국가전문자격시험 중 14개 시험에서 응시수수료를 통합 징수하여 미응시 시험 차수의 응시수수료까지 납부하고 있으므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시험차수별로 응시수수료를 구분하여 징수하는 한편, 국가전문자격시험별로 응시수수료의 차이가 크므로, 시험 시행방식 등 특성을 고려하여 응시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3) 코로나19 확진자 등에 대한 시험응시 제한 규정 개선방안 마련 필요

- ▶ 코로나19의 재유행에 대비하여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등에 대한 현행 시험응시 기회 제한 규정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4)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노력 필요

- ▶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행 불복 관련 발생한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 모범 고용주로서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시정노력할 것

(5) 외국인근로자 관련 보험제도 개선 필요

- ▷ 외국인근로자 및 이들을 고용한 사업자가 가입하는 상해보험, 보
중보험 등의 보험금 지급률이 60%에 불과하므로, 보험료 인하 또는
보험금 지급조건 개선 등 관련 보험제도를 개선할 것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 장애인고용의무 사업장의 장애인 허위 채용 실태조사 필요

- ▷ 장애인고용의무 사업장이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하는 허위신고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채용 관련 실태조사를 시행할 것

(2)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의 장애인차별 등에 대한 감독 강화 필요

-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장애인 차별 및 괴롭힘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동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인권침해
및 차별 등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조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할 것

(3) 트루컴퍼니 포상제도 개선 필요

- ▷ 장애인 고용확대를 성실히 추진한 기업에 대해 수여하는 포상제도
인 트루컴퍼니에 선정된 기업 중에 장애인의무고용률 미달인 기업

도 있으므로, 포상제도가 기업의 이미지 제고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

(4) 근로지원인 제도의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 범죄경력 여부 등 근로지원인에 대하여 일정한 자격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사업주가 제도를 악용하여 형식적으로 근로지원인을 채용하면서 실제로는 근로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5)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의 임금 수준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은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은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것

(6) 장애인고용컨설팅 사업 대상 확대 필요

- ▶ 장애인 고용여건을 진단·분석하여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고용컨설팅 사업 대상을 모든 공공부문과 민간기업까지 확대하여 사업의 효용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7) 장애인고용교육원 설립 검토 필요

- ▶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교육을 통해서 장애인 노동자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교육원의 설립을 검토할 것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

(1) 한국폴리텍 운영 관련 인력채용 방식 개선 등

- ▷ 임원 등의 채용 시 비전문가가 채용되거나 특정 단체 출신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며, 대학운영 관련 전문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할 것
- ▷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결과 미흡판단을 받았으며, 업무 유형별 고객만족 수준 평가 중 ‘2년제 학위과정’ 항목에서 D등급을 받은 바, 내년에는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편 검토 필요

- ▷ 구직자와 기업 간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개편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것

▶ 노사발전재단 ◀

(1) 난임 유급휴직 사용 활성화 노력 필요

- ▷ 노사발전재단은 취업규칙 개정 등을 통해 난임 유급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난임치료휴가의 인지도 및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노력 필요

- ▷ 근로자건강센터의 파견법 위반 논란, 부당해고 관련 구제명령 이행 불복 등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에 대하여, 각 산하기관이 모범 고용주로서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시정노력할 것

▶ 건설근로자공제회 ◀

(1) 난임 유급휴직 사용 활성화 노력 필요

-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취업규칙 개정 등을 통해 난임 유급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난임치료휴가의 인지도 및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 건설근로자 취업지원 사업 확대 필요

- ▷ 건설근로자의 최초 구직경로가 73.6%가 인맥, 14.2%가 유료직업 소개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건설근로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취업지원센터 실시 건설근로자 취업지원 사업을 확대할 것
- ▷ 건설업에 취업하는 여성 및 20~30대 청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여성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책은 미흡하므로,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취업지원 사업을 확대할 것

(3) 건설근로자에 대한 교육운영 방식 개편 필요

- ▷ 건설기능향상 지원사업의 경우, 대부분의 훈련과정이 주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건설근로자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교육운영 방식을 개편할 것
- ▷ 건설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숙련된 기술을 가진 노인들을 건설훈련교사로 양성하여 교육훈련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여성 건설근로자에 특화된 교육훈련 사업을 마련할 것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1) 사회적기업 인재개발원 설립 검토 필요

- ▷ 사회적기업을 선도해 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인재개발원의 설립을 검토할 것

(2) 난임 유급휴직 사용 활성화 노력 필요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취업규칙 개정 등을 통해 난임 유급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난임치료휴가의 인지도 및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한국잡월드 ◀

(1) 난임 유급휴직 사용 활성화 노력 필요

- ▶ 한국잡월드는 취업규칙 개정 등을 통해 난임 유급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난임치료휴가의 인지도 및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 한국잡월드 휴관일 변경 검토 필요

- ▶ 한국잡월드가 휴관일을 월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하였으나, 휴일 이용 편의를 위해 일요일에 개관하는 방향을 검토할 것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

(1) 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전문교육 확대 필요

- ▶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기 위해 수사·감독기법 등 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전문교육을 확대할 것

(2) 취약노동계층 및 사업주 대상 노동인권교육 강화 필요

- ▶ 취약노동계층 및 사업주의 노동과 안전에 대한 인식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할 것

3) 기상청 소관

▶ 기상청 본부 및 소속기관 ◀

【기상예보의 정확도 제고 및 기상서비스 개선 관련 사항】

(1) 기상청 앱(날씨알리미) 운영 개선 필요

- ▷ 한국에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사용 편의를 위하여 기상청 앱(날씨알리미)에서 영문서비스를 제공할 것
- ▷ 기상청 앱(날씨알리미) 운영을 위하여 매년 2억원 이상의 유지관리 비용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앱 중 활용률은 10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기상청에서 오픈 API를 제공하고 민간에서 앱을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의 예보 정확도 제고 필요

- ▷ 2020년 한국형수치예보모델 고도화 사업 완료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 비하여 오히려 예보의 정확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고, 기존 UM모델에 비하여도 예보의 정확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 바, 예보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3) 지진 조기 현장경보 제공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 필요

- ▷ 지진 발생 시 조기 현장경보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연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

도록 노력하는 한편, 장기간 관련 연구를 수행해 온 미국 등의 국가와 공동연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4) 도로기상정보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필요

- ▷ 도로 상의 살얼음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도로위험기상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CCTV에 의존한 실시간 중계에 불과하여 실제 교통사고 등을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도로기상관측장비 설치를 확대하고 도로 상의 살얼음 발생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강화하며, 도로기상정보 전달 조직을 구성하는 등 도로기상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계를 구축할 것

(5) 재난 위기경보 전달체계 개선 필요

- ▷ 코로나19로 인하여 재난문자의 발송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일부 국민들이 재난문자를 받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재난문자 외 위기경보를 전달하기 위한 체계 마련 방안을 강구할 것

(6) 예보 관련 용어 명확화 필요

- ▷ 비·빗방울, 낮 등 기상청의 예보 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가 실제 국민들의 인식과 차이가 있어 예보의 정확도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기상청의 예보 시 사용되는 용어를 명확히 정리하고 정확한 의미를 홍보할 것

(7) 야외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폭염 영향예보 개선 필요

- ▷ 폭염 발생 시 복장 등으로 인하여 일반인 대비 야외 노동자의 체감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폭염 영향예보 시 복장, 업무의 강도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
- ▷ 야외 노동자 중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이 높으므로, 외국인 노동자의 폭염 대응 요령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기상 장비 및 기상 인력 관련 사항】

(1) 기상관측장비 관리 강화 필요

- ▷ 기상관측장비의 실제 장애 복구에 소요되는 시간이 유지관리 시 적용되는 장애복구 허용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조속한 장애 복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관측 데이터 수집률의 관리가 수기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 관리 체계가 부실하므로, 전반적인 관측 데이터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2)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상관측시설 관리 체계 개선 필요

- ▷ 기상청의 기상관측망 외로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부 등이 다수의 기상관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기상관측시

설의 중복 설치를 방지하고 기상관측자료의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상관측망의 종합적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 현행 기상관측표준화법 상 관측기관이 관측시설을 설치·교체·이전할 경우 사전 신고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 ▷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내 기상관측업무 종사자들이 기상관측표준화법 상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전문성 확보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현행 기상관측표준화법 상 자격요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 ▷ 지방자치단체의 기상관측시설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기상관측시설 운영에 대한 점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3) 라디오존데 국산화 지원 계획 마련 필요

- ▷ 고층기상관측에 활용되는 라디오존데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상용화 지원이 미흡하여 여전히 외국산 라디오존데를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라디오존데 국산화를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
- ▷ 기상관측장비의 국산화율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하므로, 실제 국내 장비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국산화율을 재조사하여 정확한 국산화 지표를 수립할 것

(4) 천리안위성의 장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필요

- ▷ 천리안위성 2A호가 2019년 7월부터 운영되는 동안 13건의 유사

장애가 연속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장비 제조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장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5) 기상관측시설에 대한 조속한 등급 부여 필요

- ▷ 기상관측시설에 대한 등급 부여가 2017년부터 추진되어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등급이 부여된 기상관측시설은 50% 미만에 그치고 있으므로, 조속한 등급 부여 방안을 마련할 것

(6) 기상관측선 확충 방안 마련 필요

- ▷ 기상관측선 보유 규모가 1대에 불과하여 해양 기상관측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기상관측선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

(7) 지방청의 기상관측장비 및 기상인력 확충 필요

- ▷ 지방청의 기상관측장비 및 기상인력 부족으로 태풍, 호우 등이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예보의 품질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태풍, 호우 등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지방청을 중심으로 기상관측장비와 기상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8) 예보관 정원 확대 등 역량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 예보 역량 강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예보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
- ▷ 예보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문예보관의 체계적인 양성 방안을 마련할 것

(9) 예보관 교대제 방식 재검토 필요

- ▷ 2020년 5월 예보관 교대 주기를 8일에서 16일로 개편함에 따라 예보관들의 근무 여건이 악화되고 만족도가 저하되고 있으므로, 예보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대제 방식을 재검토할 것

(10) 동두천 관측소 인력 배치 필요

- ▷ 중규모 기상관측을 위한 거점 관측소 4개소 중 유일하게 무인관측소로 운영되고 있는 동두천 관측소에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기상행정 및 감시, 감독 관련 사항】

(1) 갑질 공직자에 대한 제재와 처벌 강화 필요

- ▷ 기상청 및 소속기관과 산하 기관에서 신고된 갑질에 대하여 제재와 처벌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갑질 공직자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할 것

(2) 내부청렴도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 내부청렴도 설문 결과가 4~5등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부패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하고 공익 제보자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내부청렴도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내부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공익 제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2018년 폐쇄된 익명게시판 운영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3) 자체평가의 신뢰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 정부업무평가 결과 기상청은 최근 2년 간 미흡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국민들의 기상 예보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의 자체평가 결과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괴리가 있으므로, 자체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4) 기상청 공무원의 행동강령 준수 필요

- ▷ 기상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기상청 공무원은 산하기관의 채용 시 시험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의 채용 시 기상청 공무원이 시험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감사를 통하여 적발되었으므로, 교육을 강화하는 등 행동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5) 기관 운영업무 처리 매뉴얼 점검 필요

- ▷ 기상청의 자체 감사 결과 사용이 중단된 회선에 대한 인터넷 요금을 납부하거나 공과금 납부를 연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전반적인 기관 운영업무 처리 매뉴얼을 점검할 것

(6)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임명 부적절

- ▷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 시 서류 및 면접 점수가 타 지원자 대비 현저히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기상청 기후과학국장과 부부 관계에 있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현 원장의 임명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기타 사항】

(1) 기상청의 철저한 이전 계획 수립 필요

- ▷ 기상청의 대전 이전으로 인한 전산장비 이동에 대규모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전산센터가 오창 슈퍼컴퓨터센터, 대방동 전산센터 및 정부대전청사 등에서 분산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전산 처리 장애로 기상 예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전 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것

(2) 기후 변화에 따른 생태 변화 연구 협력 필요

- ▷ 현재 국립생태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후 변화에 따른 생태 변화 연구지원을 위하여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래 기후 변화 예측 연구 방안을 마련할 것

(3) 인공강우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 필요

- ▷ 현재 미국, 중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산불 예방, 가뭄 해소, 미세 먼지 저감, 생태 보호 등의 목적으로 대규모 인공강우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나, 우리의 인공강우 기술 개발 수준은 여전히 기초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으므로, 인공강우 기술 개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것

(4) 기상지진장비인증센터 이전 건립 사업의 철저한 집행 관리 필요

- ▷ 당초에 소음, 진동 등 주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하고 부지를 선정함에 따라 부지 변경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증액되고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사업 집행을 철저히 할 것

(5) 국립기상박물관의 홍보 강화 및 장애인 접근성 제고 필요

- ▷ 국립기상박물관 건립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으로 관람객이 하루 6~7명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홍보를 강화하고 초등학교 체험교육과 연계하는 등 관람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 ▷ 국립기상박물관 관람을 위한 장애인의 이동 편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시 점자시설도 미설치되어 있으므로, 장애인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6) 기상관련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 기상 관련 보험 및 금융 상품의 개발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기상관련 서비스업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7) 슈퍼컴퓨터의 경제적 활용 방안 마련 필요

- ▷ 현재 슈퍼컴퓨터의 경우 구매에 대규모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6년의 사용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그대로 폐기되고 있으므로, 슈퍼컴퓨터를 리스 방식으로 구매하거나, 슈퍼컴퓨터를 분할하여 재활용하는 등 슈퍼컴퓨터의 경제적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

(8) 지진 발생 및 화산 폭발 대비 안전교육 및 홍보 강화 필요

- ▷ 경주·포항 지진 등 지속적으로 지진이 발생하고 있고, 백두산과 울릉도 등의 화산 폭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지진 발생 및 화산 폭발에 대비한 대국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를 강화할 것

(9) 백두산 폭발 대비 남북 공동연구 필요

- ▷ 백두산 폭발 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위하여 남북 공동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10) 기상청 포털의 기상 용어 정비 필요

- ▷ 기상청 포털에 기상관측 용어에 대한 설명이 자료별로 상이하게 기재된 사례가 있으므로, 자료별 용어에 대한 설명을 정비할 것

(11) R&D사업의 성과 제고 필요

- ▷ 최근 5년간 24건의 R&D사업에 1,46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기술이전으로 발생한 기술료 수입은 2,500만원에 불과한 실정 이므로, R&D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12) 기상청장의 탄소중립위원회 참여 필요

- ▷ 기상청장이 위원으로서 탄소중립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

(13)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필요

- ▷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회의가 대부분 서면회의로 진행되고 있는 등 운영이 부실한 측면이 있으므로,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운영 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14) 전북기상과학관 건설 예산 추가 반영 필요

- ▷ 현재 건설 중인 전북기상과학관의 전시공간 가용 면적당 예산이 충주기상과학관, 밀양기상과학관에 비하여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추가적으로 반영하 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국립기상과학원 ◀

(1) 신규 장비 구입 시 구체적인 운영계획 수립 필요

- ▷ 국립기상과학원에서 도입 시 타당성을 철저히 조사하지 아니하고 2017년 드론을 구매함에 따라 해당 드론의 운용 횟수가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향후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한 후에 신규 장비를 구입할 것

(2) 연구사업의 현업 반영 강화 필요

- ▷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지난 5년 간 수행한 연구사업의 세부 과제 67건 중 현업에 직접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과제는 39건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연구사업의 결과가 현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4)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관

(1) 산재예방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역할 제고 필요

- ▷ 2020년 3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산재예방사업비를 산재기금 지출예산 총액의 3%를 목표로 매년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합의안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이행할 것

(2) 이행점검위원회 인원 충원 및 역할 제고 필요

-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이행점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정원 7명 중 현원이 4명에 불과한 상황이므로 인원 충원 등을 통해 이행실적 검증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3)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구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의제를 구체화하거나 사회적 대화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운영하는 연구회가 운영세칙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연구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4)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 필요

- ▷ 정부는 2020년 12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통하여 2022년 말까지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단계별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2025년까지 391만명의 자영업자를 모두 가입시키겠다고 발표하였으

나, 아직 사회적 대화기구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있으므로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 필요

- ▷ 공무원노조와 교원노조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가 신설된 만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계층별위원회의 역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하여 설치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계층별위원회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정부 산하 다른 위원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역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7)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논의 추진 필요

- ▷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대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사회적 대화 의제로 삼아 적극적으로 논의를 추진할 것

(8) 포스코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악용 방지를 위한 역할 필요

-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참석한 포스코의 상생발전 공동

선언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참여회사에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특정 노조 소속으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진행 중인 근로자 자녀에 대하여는 장학금 지급을 유보하고 있으므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노조 탈퇴, 소송 포기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역할을 다 해줄 것

(9)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신속한 심의 절차 진행 필요

- ▷ 노조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시행되었으므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심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할 것

(10) 개별사업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근로시간면제 심의 필요

- ▷ 병원과 같이 24시간 교대제로 운영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함에 있어 그 특수성이 반영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적정성을 심의할 것

(11)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빅데이터 구축 및 관련 연구 필요

- ▷ 플랫폼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문제 해결을 위하여 빅데이터 구축 및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